

# 교과서연구

제 60호

2010. 6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전찬구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이화성, 김정호,  
윤광원, 홍후조, 권영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빌딩
- 홈페이지: [www.ktrf.re.kr](http://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mailto:editor@ktrf.re.kr)

- \* 표지 글씨 : 신두영
- \* 편집 디자인 : (주)미래엔컬처그룹  
국정교과서팀

## ● 권 두 언

- 2 \_\_\_\_\_ 우리 교과서의 정체성 / 김만곤

## ● 특별 기획: 인정 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를 위한 과제

- 4 \_\_\_\_\_ 우리나라 국 검정 도서의 인정화 전망 / 송인발  
11 \_\_\_\_\_ 인정 도서로 전환된 전문 교과 도서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병욱  
17 \_\_\_\_\_ 인정 도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 문홍근  
22 \_\_\_\_\_ 우리나라 교과서 인정 제도 개선 과제 / 김재춘

## ● 특별 대담

- 27 \_\_\_\_\_ 교과서 선진화의 길 / 김만곤 홍후조 김혜원 조성준 김태훈

## ● 현장 교육

- 44 \_\_\_\_\_ 우리 학교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 권오실

## ● 논 단

- 49 \_\_\_\_\_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형성과 과제 / 정영근  
53 \_\_\_\_\_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자율형 공립 학교 적용 사례 / 박경옥  
59 \_\_\_\_\_ 교육과정 자율화를 구축하는 주변 요인 / 이평수

## ● 연 재

- 62 \_\_\_\_\_ 일본의 교과서 편찬 과정 / 기미지마 가즈히코

## ● 교과서 편집자의 변

- 66 \_\_\_\_\_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 / 김범상

## ●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 70 \_\_\_\_\_ 음악 교과서의 명곡 둘러보기 / 김대원

## ● 자 료

- 76 \_\_\_\_\_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84 \_\_\_\_\_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85 \_\_\_\_\_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86 \_\_\_\_\_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우리 교과서의 정체성



김만곤  
교과서연구지  
편집기획위원장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가 아이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이나 가르치면 만족하게 될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OECD 평균보다 하루에 3시간이나 더 많다는 데도 왜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일까. 더 궁금한 것이 있다. 우리 교육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초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해 기초 기본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철저히 주입하고 암기시키는 일에 몰두해야 하고, 사고력이나 창의력 같은 것은 우연에 맡기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는 사고력이나 창의력 같은 이른바 고등 정신 기능을 함양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기초, 기본이 되는 내용을 주입, 암기시키는 따위의 교육은 가정이나 학원에 맡겨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지식의 주입, 암기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는 그것을 문제 삼는 일 자체가 식상하기도 하여 그 이야기조차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미 30년 전 『제3의 물결』(1980)에서 ‘시간 엄수, 복종,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 현대 산업 사회 교육의 맹점’이라고 주장한 앨빈 토플러는, “폴빵 찢듯 하는 교육”(2007) “밤 11시까지 가르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육”(2008)이라며 우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 있다. 교육부(2000)에서도 한때 교육적 지식은 “정태적인 관조적 지식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행적 지식과 균형을 이루어 통합되어야” 하고, “언어나 기호로써 표현된 이론적 체제와 같이 매마른 경험의 결정체가 아니라, 전인적 관심, 정열적 탐구, 진지한 신념, 그리고 체질화된 암묵적 수준을 포괄하는 총체적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고, 그동안 이러한 해석을 수정한 적도 없다.


사고력이나 창의력도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으로부터 우리나라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거나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그러한 방법에 의한 경험 외의 경험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읽고 쓰고 외운 지식을 한

치의 오차 없이 평가한 결과를 보아 “이게 교육과 학습의 분명한 결과!”라며 속 시원해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갈 데까지 가 보자!”라는 세력이다. 가령 201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어떤 대학들은, 심지어 조교들을 동원해 기계적으로 수능 내신 출결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뽑아 놓고도 ‘입학 사정관제’를 빙자했다고 한다. “뭘니 뭘니 해도 객관식 점수가 미덥다.”라고 했을 그 기막힌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일부 대학일 뿐”이라는 식의 위안을 찾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 ‘점수’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져야 ‘입학 사정관제’ 같은 걸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될는지 아득한 느낌을 가진다. 우리가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지적을 생각하면 초조해지기도 한다. 인공 지능학자 로저 산크(2002)는 이렇게 썼다. “지난 세기와 그 이전의 수많은 세기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지성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의 축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하는 능력, 어떤 관념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교육은 정보의 축적을 의미했고, 대중이 생각하는 지성이란 자신이 축적한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벽에 썩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그런 날이 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그는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다. “우리가 아직 교사와 교실과 교과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50년 뒤에는 거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교육 개념을 바꾸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수능 성적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답을 암기하는 것이 지능의 증거라고 생각했는지 물을 것이다.”

그 변화에 50년이 필요하다면 또 “아직은 이 방법으로 가르쳐 보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꼭 수능 점수 1, 2점을 따져야 하겠다는 환경에서라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수준별 수업’, ‘교과 교실 수업’ 같은 방법이 잘 먹혀들 리가 없다. 많이 설명하고 많이 암기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투입할수록 유리하다면, 거기에 무슨 교육 논리나 학습 원리가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데 교과서와 문제집 외의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학교와 학원에서의 교육이 서로 차별화되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겠는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방안으로써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대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고, 친근한 교과서”는 어떤 수업, 어떤 학습 상황을 염두에 둔 가정일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이른바 ‘미래형 교과서’는 수능 대비 방송이나 일류 학원의 강사처럼 유창하게 설명하는 수업, 그 설명을 감탄하며 경청한 뒤에 들은 내용에 대한 ‘묻고 답하기’에 유용한 교과서인가, 아니면 주어진 또는 스스로 설정한 학습 과제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평가하고, 선택하고, 조직하고, 활용하고, 생산하고, 재구성하는 데 관련된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수업(교육부, 2000)에 유용한 교과서인가.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전달, 수용에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우리 교과서가 이제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과서로 선진화하기를 기원해야 할 시기이다. 

## 우리나라 국 검정 도서의 인정화와 전망



송인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호(2010. 1. 11.)에 의해 구분된 교과용 도서의 종수 비율은 국정 39%(334종), 검정 16%(136종), 인정 45%(382종)<sup>1)</sup>이다.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인정 도서의 비율은 13%(제7차 교육과정) → 25%(2007 개정 교육과정) → 45%(2009 개정 교육과정)로 점점 증가<sup>2)</sup>하는 추세이다. 국 검정 도서의 인정화를 두고 그 시대적 필요성에는 관련자 대부분이 공감하면서도 막상 당면하는 업무량이나 교과서 개발 시장의 진입 가능성 등에는 반응이 엇갈리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 검정 도서의 인정화 과정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교과서 다양화에 대한 요구

그동안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중심이었던 국 검정 제도는 국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각 부문에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는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다양화되고 있어,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교과서 체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 부가 주도하는 자율화, 다양화 정책들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주된 교재로 쓰이고 있는 교과서 역시 다양한 내용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 검정 도서의 인정 전환 확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환경을 반영한 조치로 다양화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 환경 조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의 변화 속도가 급격한 컴퓨터 관련 분야나 전문 실기 능력이 필요한 예술, 체육, 국제 관련 분야 78개 교과목이 인정 도서로 구분되어 인정 도서 확대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국 검정 도서의 인정 전환은 2007 교육과정 개정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국 검정 도서로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나 지역 여건,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 II. 국 검정 도서의 인정화

교과용 도서는 1952년부터 편찬 주체별로 또는 검정 방법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서별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도서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정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저작권을 가진 도서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	국 검정 도서가 없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

심의권자	장관(심의 위원 위촉)	장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	장관(시·도 교육감에게 위임)
절차	편찬 → 심의	편찬 → 심의 → 선정	편찬 → 선정 → 심의
저작권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저작자	저작자
과목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교과	중·고등 보통 교과 대부분	신설 및 교양 과목, 고교 전문 교과
장점	소수 선택 과목 교과서의 질 유지 가능	교사,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 보장	현장 교원의 교과서 개발 참여 유도 용이
단점	내용의 획일성	검정 심사 비용 부담	질 관리 체계 부족 교과서 인정 업무 중복 예상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이념 구현 및 아동의 발달 수준에 통일이 필요하거나, 수요가 적어 민간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국정 도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개편될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 검 인정 도서로 새롭게 구분하고 있다. 우리 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응하는 교과서 편찬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확대된 국 검정 도서의 인정 전환을 추진하여 현장 교원의 교과서 편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고교 보통 교과 중에서 수능 과목으로서는 처음으로 고교 과학을 융합형 개정 교육과정 취지 및 현대 과학 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기 쉽도록 인정으로 전환하고, 체육, 음악, 미술 등은 현장 교원의 참여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가 출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특목고 및 전문계고 전문 교과와 경우, 산업 현장 및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교과서를 해마다 개발하거나 수정, 보완하며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정 전환을 추진하였다.

### Ⅲ.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2.)과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2007. 6.)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부터 ‘인정 도서 확대’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의 교과서 제도 개선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교육청, 학교, 출판사, 교사 등 인정 도서 개발 주체의 다양화, 심의 및 채택 기준 미흡, 수정 보완 체계 미비, 인정 도서 전담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며, 인정 도서의 체계적 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전문 직업 분야의 지식 변화를 교과서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자율 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양 과목, 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에 심의 없는 인정 도서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1호(2007. 6. 22.)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최초의 구분 고시이다. 이 고시문에서 국제 계열 전부 등 전문 교과 82종 등이 인정 도서로 구분되었다. 이어진 2007년 8월의 수정 고시에서는 중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검정 도서로 구분한 교과목의 지도서를 인정으로 전환하였다. 검정 심사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건의도 있었으나, 교사의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반영이었다.

고시 제2009-4호(2009. 1. 21.)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최종 구분 고시이다. 우리 부는 고등학교의 다양한 유형 및 특성에 부합되는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일부 전문 교과에 인정 전환 및 국정 도서 개발 체제를 개선하였다. 즉, 과학 및 예술 계열 전문 교과 모두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고, 외국어 계열의 경우 교육과정상 필수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도서, 전문계고 일부 도서를 인정으로 전환하였다<sup>3)</sup>.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sup>4)</sup>까지 현장 교사, 관련 학계,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총 10여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인정 전환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다. 즉, 교과서 활용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과목,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매우 필요한 과목은 인정 전환하고, 교과 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사 과목은

통합하며, 교과서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은 과목은 수정, 개편하기로 하였다.

관련 학계나 대학 교수, 기존의 국정 도서 집필자들은 인정 전환으로 국가 수준에서 신장시켜야 할 직업 능력 신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또, 특정 지역에만 적합한 교과서 개발은 전문 교과서의 특성 과도 무관하며, 교과서의 심각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2008년 7월 직업 교육 전문학회의 전문계고 교과서 인정 전환에 대한 반대 성명이 있었다.

인정 전환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다소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국정 도서가 학교 여건이나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 도서 대신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초 필수 과목은 국정 체제를 유지하되, 실습 및 심화 과목은 인정 전환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자율 강화회나 교과 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교재 개발 분위기 조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 교과서의 경우 교과목 수가 너무 많아 통합이 필요하며, 일부 도서의 경우는 수정 개편도 필요하다는 새로운 의견도 개진하였다.

인정 전환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인정 도서 개발 및 심사의 전문성 부재,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인정 확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서'를 아예 교과용 도서의 범주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인정 도서 심의를 위한 별도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였다.

인정 전환과 관련하여 합치된 의견은 인정 전환에 따른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소수 선택 과목의 경우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미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공통된 목소리였다. 또, 심사 및 개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과목을 분담하자고 제안하였다.

국정 도서의 인정 전환에 앞서 발행사와 맺은 국정 도서 발행권 설정 약정(2008~2012년)의 변경이 필요하였다. 발행권 설정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정 기간 변경으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전문 교과서의 인정 전환에 대해서 발행사의 동의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우리 부는 2009년 새로 인정 전환하여 개발 착수하는 27개 도서에 대하여 서울, 부산, 경기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였다.

#### IV.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과 '교과서 선진화 방안' (2010. 1.)

최근의 교육 정책들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과서'는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과서, 산지식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교과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우리 부는 2009년 4월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문 부수,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정 도서를 검정 또는 인정으로 전환하되, 초등 국어, 도덕, 사회는 국정을 유지하며, 교과서 개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에 대한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교과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단위 학교에서의 자율과 재량을 대폭 강화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7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된 교과서 선진화 T/F에서는 교과서 다양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고교 선택 과목 중에서 개발 착수하지 않은 국정 도서는 모두 인정 전환하고, 검정 도서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인정 전환을 건의하였다. 2009년 12월 직업교육학회 등은 전문계고 직업 교육 정책 대토론회(프레스 센터, 300여 명)에서 전문계고 국정 도서의 인정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정 전환으로 인하여 소수 선택 과목의 교과서는 개발되지 않을 것이고 질 저하도 염려되므로 예산과 조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년 1월 우리 부는 고시 제2010-1호를 통해 국정 도서이었던 전문 교과 101종과 고등학교 선택 과목 등 39종을 새롭게 인정 도서로 전환하였다. 고교 선택 과목 교과서 및 각급 학교 지도서는 모두 인정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 특성 및 개발(공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정 전환하기로 하였다. 국정 도서는 2010년 개발 착수되는 전문 교과 101종부터 인정 전환하고, 검정 도서는 검정 실시 공고되지



않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 등의 28종과 학계의 컨센서스가 모아진 과학 9종, 초등 영어 전자저작물 2종에 대해 우선 인정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수능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인정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 교육과정기별 국 검 인정 구분 종수 현황

구분	국정	검정	인정	계
제7차 교육과정(1997)	721	187	134	1,042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537	181	239	957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334	136	382	852

\*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 인정은 1종 다책임.

전문 교과만이 아니라, 보통 교과까지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리 부는 T/F 및 시·도 담당자 회의, 정책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졌다. 2009년 8월 7일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이루어진 T/F 회의에서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국정 도서와 일부 보통 교과 검정 도서의 인정 전환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장의 요구와 신기술이 교과서에 보다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반영되려면 전문 교과의 인정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나, 교과서 개발을 담보하고 인정 도서의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 보통 교과의 인정 전환에는 심사 과정에서의 교과별 전문 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 학회, 연구회 등) 참여 등 인정 심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계속 요구해 오고 있던 사항, 즉 교과용 도서의 범주에서 지도서를 제외하고 자유 발행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거셨다.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활성화하여 시·도 교육청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감 협의를 통하여 교과를 분담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교과서 인정 신청권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발행사에게도 신청 권한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정도서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인정 도서의 위계상 약점을 극복하려면 국 검 인정 도서 체계 및 지위와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은 인정도서 확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및 교육청 조직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정 업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개발 교과를 분담하자고 제안하였다. 또, 국정 도서 및 시·도 교육청 인정 도서 개발진 등 전국적인 인력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2009년 9월 15일에 교과서 선진화 T/F 주관으로 미래형 교과서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과서 편찬 제도의 자율화가 필요하며, 편찬 제도 자율화의 선결 조건으로 교과서 내용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12월 9일에 교과서 제도 개선 워크숍이 온양에서 열렸다. 인정 도서 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재강조되었으며, 감수 기관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감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전문 교과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감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또, 시대적 조류가 교사 중심의 교과서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개발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어 교사가 제작한 자료도 교과서로 바로 쓸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V. 교과서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

우리 부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안착을 위하여 2010년 수요가 적어 민간 발행사가 개발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 선택 과목 인정도서 등 186종에 대한 개발비를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였다. NEIS 주문 부수를 기준으로 한 시·도 교육청별 개발 주관 인정 도서 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도서 수	48	14	6	13	5	10	2	44	3	9	4	5	5	9	7	2	186

또, 전문 기관, 학회, 대학 연구소, 교과 교육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감수 기관을 공모하고 지정된 감수 기관에 대해서는 감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감수 기관은 감수 인력풀을 확보하여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내용의 정확성 및 중립성 등 감수 기준을 마련하고, 감수 의뢰받은 도서에 대하여 감수를 실시하거나, 감수 위원을 시·도 교육청 인정 심사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감수 결과를 활용하여 인정 심사하되, 고교 선택 과목 중에서 이념 편향성 논란이 우려되는 과목(음악, 미술 등)이나 수능 과목은 감수를 의무화하고, 전문 교과 및 신설 과목의 인정 도서 등은 감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정 심사의 내실화 및 인정 도서의 질을 제고하고, 교과 관련 기관들의 감수 기회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 인정도서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하여 인정 도서 업무 전문성을 신장하기로 하였다. 인정 도서 업무 편람을 발간 보급하여 인정 도서의 개발 및 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특히 산업 수요 반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이 반영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기관)와 협력하여 개발자 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0년 3월 25일에 교과서 선진화 방안 구현 워크숍이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인정 도서 개발 모범 사례 발표를 통하여 시·도 교육청 인정 업무의 보완을 꾀하였다. 발표자는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 중심의 집필진 구성, 인정 도서 심의 위원에 산업계 인사, 교수 등 현장 전문가 포함, 한글 맞춤법 검토를 위한 국어 교사 포함안을 제안하였다. 또, 인정 도서 결재 전에 출판사에서 조판을 완성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개발비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도 충고하였다.

## VI. 국 검정 도서의 인정화 전망

### 1. 인정 도서 인정 사무의 지방 이양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인정 도서에 대한 인정 사무는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2009년 5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위임 사무이던 인정 사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도록 확정하였다. 현재는 인정 도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로 각급 학교의 재량 활동 및 전문 교과 교과서가 대부분이고 종류도 많으며,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다양화 및 특성화에 의하여 매년 인정이 확대되고 인정 신청 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정 도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인정 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이 필요하다. 인정 도서 심의 위원으로 지역 대학 교수 등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함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이다.

### 2. 다양성과 창의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들

지식 기반 사회, 글로벌 시대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보유를 넘어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요구된다. 우리 부에서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으로



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학교 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로 특성화, 다양화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교원 능력을 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됨으로써, 학교별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선택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습 부담 완화와 흥미도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졌고, 자율형 공 사립고, 교과 교실제 및 과목별 중점 학교 등 다양한 일반계 학교 유형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부여되었다.

### 3. 국 검정 도서의 인정화 전망

정부의 정책 방향을 통하여 학교 자율성 제고는 정책적 요구와 더불어 시대적, 사회적인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인정 도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부는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하고, 초 중 고 보통 교과의 경우에도 인정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였던 교과서 개발은 민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며, 정부는 교과서 개발 공급보다는 예산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의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교과서 개발 주체로서의 교사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는 국가가 개발하여 제공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수동적 존재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능동적 존재로 변모할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일치되면 수업의 효율성과 목표 도달도가 높아질 것이며,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교과서 개발이 가능해져 교사의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 주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들이 수업에 활용될 것이다. 교육청 및 학교도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변화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리라고 본다.

## Ⅶ. 국 검정 도서 인정화의 과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인정 도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교과서 관련 법령이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동 규정 제17조를 보면 “인정 도서의 사용 범위에 대해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 도서를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령하에서 인정 도서의 사용 범위는 지극히 제한되고 소극적이므로,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능동적 인정 도서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 인정 사무에 관한 사항이 관련 규정에는 지극히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 도 교육청의 규칙이나 업무 처리 지침 등의 상세화 및 정비가 시급하다.

시 도 교육청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및 조직 보강이 절실하다. 시 도 교육청별 인정 도서 업무 역량의 차이는 매우 크게 드러난다.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이동 때문인지 전문성에서 매우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업무 담당자 회의 참석자가 매번 달라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들은 회의 때마다 인력이나 조직 보강을 호소하며, 현재 교육청의 조직으로서는 인정 도서 업무를 즐겁고 알차게 수행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호소한다. 시 도 교육청 및 발행사는 인정 지침이나 외형 체제 등에 대하여 여전히 중앙 정부 차


원의 통일된 지침을 원하고 있으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정 도서의 특성상, 인정도서협의체 등을 통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거나 업무를 숙지하여 교육청별로 업무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정 도서와 관련한 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의식 변화 없이는 인정 도서 확대, 교과서 다양화는 공염불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교과서 정책 기능을 강화할 교육청의 역할 및 기능 변화가 시급하다.

현장 교원들의 교과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정 도서 개발 환경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연수 실시 등 교과서 개발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 인정 도서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 현재 충북교육청의 경우, 인정 도서 개발 실적을 승진 가산점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에 비하여 인정 도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정 도서의 경우, 도서의 원고 파일(인정본)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발행사는 추후에 별도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한 교과서가 인정받을 경우 일정 수준의 개발비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교과서 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주문 부수가 소량인 경우, 발행 공급을 위한 발행사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발행사 선정이 어려운 경우는 인쇄소에서 단순 제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문량이 많은 인정 도서에 대해서는 국 검정 도서의 공급 체제에 통합시켜 인정 도서를 안정적으로 적기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 VIII. 마치며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법률상의 지위를 비롯하여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 무엇보다도 위력적이다.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풀이해 놓은 하나의 교수 학습 자료가 아니라 절대적인 교육 자료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

얼마 전에 교과서 제도 탐방단의 일원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최근 들어 소위 교과서 ‘자유 발행제’에 대한 논의가 심심찮게 일고 있는데, 출장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그 시기적인 적절성에 대한 답을 대신할까 한다. 영국의 경우, 가르쳐야 할 주제는 교육과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자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즉, 교육과정 해석에 대한 자율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자율권은 철저히 보장된다. 인터넷 자료 등 개방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창안 자료가 많을수록 수업 효과가 크며, 교사는 적합한 자료를 제작하고 고민하며 수업할 책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균등 기회를 관리하고 있고, 동일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양측은 교사 양성과 교육과정 관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교과서 집필의 다양한 능력을 갖춘 교사 양성이 중요하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과서 집필의 자유가 존중된다.

우리 사회는 교과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요구 또한 강하다.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들과 해마다 수십 건씩 요구되는 각종 공공 기관의 교과서 반영 요구들을 보면 여전히 교과서는 절대적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해석해 놓은 하나의 자료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된다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자료 역시도 존중받는 사회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교육, 나아가 교과서 선진화 정책은 성공하리라고 본다. 

1) 구분 고시 문서의 종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며, 국정은 1종 1책, 검 인정은 1종 다책임.

2) 제7차 교육과정: 국정 69%(721종), 검정 18%(187종), 인정 13%(134종)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정 56%(537종), 검정 19%(181종), 인정 25%(239종)

3) 자세한 내용은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이화성, 교과서연구 제57호) 참조

## 인정 도서로 전환된 전문 교과 도서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며

급변하는 사회 및 고도화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과학 기술의 변화를 교과서에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을 필두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 사고를 해낼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주요 교육과정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 내용의 변화가 빠른 전문 교과는 보통 교과와는 달리 교사가 자율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교과서가 아니라 지역 또는 학교 단위에서 개발한 교육 자료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발행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전문 교과 도서의 발행 제도를 기존의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 인정 제도로 개편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문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교육을 하려면 동일한 교육과정 안에서도 교과서 개발 또는 수정 보완의 주기가 짧아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서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적은 인정 도서 제도가 전문계고 교육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도 국 검정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를 인정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sup>1)</sup>. 2007년 현재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 56%, 검정 19%, 인정 25%이었던 것을 2010년에는 국정 39%, 검정 16%, 인정 45%로 전환하고, 2012년까지는 고교 전문 교과 교과서 전체를 인정 도서로 전환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고등학교 보통 교과도 인정 교과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정 도서 확대 방안 추진을 통하여 교과서 개발 기간 축소 및 개발 채택 수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 교과의 경우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융합형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경우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교과서 출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정 도서 확대 방안 도입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전문계 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교과(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 해양에 관한 교과, 가사 실업에 관한 교과)의 경우 산업 현장 및 기술 발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수시로 교과서를 개발 또는 수정 보완하게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교과 도서의 발행 제도가 국정에서 인정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른 장점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안 시행으로 인한 교과서의 질과 교육 경쟁력 저하, 그리고 교육 환경 격차의 심화가 예상된다.

### II. 전문 교과 도서 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문제점

현재의 도서 발행 시스템에서는 인정 도서가 국정과 검정보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질이 높아야 하

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첫째,** 국정에서 인정 도서로의 전환에 따른 도서 개발 및 인증 주체의 변화로 이를 위한 도서 개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정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거나, 인정 심사를 검정에 준하여 받거나, 심의가 필요 없는 인정 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한 상태이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담당관이 없거나 타 업무와 함께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관이 있는 정도이어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

**둘째,** 국정 도서가 인정 도서로 전환됨에 따라 도서 개발 비용이 감소되거나 투자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이에 따른 교과서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존의 국정 도서 발행 제도는 초등학교 전 교과와 중·고교의 국어, 국사, 도덕, 고교의 전문 교과, 그리고 경제성이 적어 민간이 저작을 기피하는 교과목에 적용되는 제도로, 물적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교과서의 질 관리 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교과서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이용순, 2009). 반면에 인정 도서의 경우는 시·도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편찬하기 때문에 국정 도서 편찬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편찬되어 교과서의 질이 국정 도서보다 낮으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교과서를 편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 중에서 경제성이 적어 민간이 개발을 기피하는 인정 도서의 경우, 교과서 발행비가 증가하여 그 발행 주체인 각 시·도 교육청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정 교과서 질 제고의 가장 현실적인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조난심 외, 2004).

특히, 전문 교과목의 경우 다양한 계열과 학과, 그리고 과목이 국가 수준에 제시되어 있고 학생 수 또한 학과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정 또는 인정 도서 형태로 민간이 개발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개발을 꺼려하고 있는 대표적 과목들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전국 2,225개 고교 중에서 전문 교과를 사용하는 고교로는 691개 전문계 고교와 97개의 기타계 고교 등 총 788개교(전체 고교 수의 35.4%)에서 450 과목의 전문 교과 도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교에서 전문 교과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보통 교과 89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계 고교 학생 수보다 매우 적어 민간 출판사는 이윤 창출이 극히 어려워 이 교과서의 출판을 꺼리고 있다. 시·도 교육청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이 과목들을 개발하여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정 도서로 발행해 왔다. 따라서, 이 과목들을 인정 도서로 발행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에 앞서 일부 전문 교과목의 경우 교과서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거나 축소된 비용과 집필 기간으로 질 낮은 교과서가 개발되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표 1】 전문 교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고교 관련 현황 자료(2009)

구분	전문계고							기타계고						총계	고교 전체
	농업	공업	상업	수해양	가사실업	종합고	소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소계		
학교 수 (개교)	29	210	189	7	69	187	691	21	30	4	27	15	97	788	2,225
학생 수 (명)	16,298	177,161	151,886	3,899	38,601	92,981	480,826	4,003	25,778	1,359	17,308	3,548	51,996	532,816	1,965,792
기준 학과 수(개)	9	22	9	12	8	-	60	-	8	-	6	2	16	76	136
전문 과목 수(개)	40	115	32	33	36	-	256	20	72	25	52	25	194	450	-

주: 기준학과 수와 과목 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현황임. 실제 학교 현장에 설치된 학과 수나 사용하고 있는 전문 교과 과목 수(책 수)는 이보다 많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2007. 2. 28.).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정에서 인정 도서로의 전환에 따른 도서 개발 및 인증 주체의 변화로  
이를 위한 도서 개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정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거나,  
인정 심사를 검정에 준하여 받거나, 심의가 필요 없는 인정 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한 상태이다.

**셋째,** 인정 도서는 해당 교과서의 연구진과 집필진 등 도서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미흡하다. 국정 도서의 경우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집필 위원, 연구 위원, 검토 협의 위원, 심의 위원, 삽화가, 사진작가 등이 금전적 보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업에 참여한다는 보람, 긍지, 자부심, 명예심으로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인정 도서의 경우 연구 집필진을 위한 사례비가 국정과 검정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국정 도서와 같이 인사 경력에 큰 영향을 주는 측면이 적어 인정 도서 개발에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다 보니 인정 도서 연구 집필진에 주로 참여하는 교사와 교수들은 평상시에는 본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가 방학이나 휴일 등의 여가 기간에 단시간, 집중적인 작업을 하며 제자 또는 조교 등 주변의 조력자들에게 의존하여 집필하는 경우도 있어 개발 과정에서의 질 관리 문제가 상존해 있었다.

**넷째,** 도서 개발 및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 저해로 인한 학력 부실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 교과서의 국정 및 인정 도서의 연구 개발비,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개고료, 일반 관리비, 편집비 등은 검정 교과서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사실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희생적 노고에 기반을 두다 보니, 검정 교과서에 비해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낮게 되고 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그래도 국정 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서 편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 구성, 사진 삽화, 편집, 디자인 등에 있어서 질 높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편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정 도서의 경우, 출판과 인쇄비를 제외하고도 과목별 약 6천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개발 기간도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인쇄 및 보급은 국가가 지정하는 대행사가 시행하는 등 도서 개발 및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번 인정으로 전환된 전문 교과의 경우, 그 개발비가 과목별로 약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비용에 삽화료, 사진료 등이 포함되어 개발 비용이 국정 도서 개발 비용의 약 절반 수준으로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또, 인정 도서 전환에 따른 저작권은 시·도 교육청이 가지게 되어 교과서 개발에 따른 제반 관리 및 보급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게 일괄 부담시키게 되므로 도서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개발된 인정 도서는 그 내용의 질과 관련된 내적 체제와 외형, 인쇄, 분량, 가격 등 외적 체제 모두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정 도서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아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인정 도서를 개발한 시·도 교육청 및 민간 출판사들이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하여 개발된 인정 도서 3년치를 한꺼번에 인쇄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교과서의 오류 및 변화에 따른 개정과 수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국정과 검정의 경우, 국가와 출판사가 매년마다 교과서의 오류 또는 지식 기술 변화에 따라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과는 달리 인정 도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질 관리가 쉽지 않았다.

**다섯째,** 인정 도서 개발 지침상에도 문제가 있다. 인정 도서 인정 및 인정 기준 결정 등이 교육감에게 권

한 위임되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나, 인정 도서 업무 및 심의에 대한 규칙 및 지침이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고 인정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 교과 인정 도서의 질 관리의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Ⅲ. 개선 방안

인정 도서 발행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한 보다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인정 방안의 제안 및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 개발 및 활용의 자율성, 다양화, 독창성, 수요자 요구 수용 가능성 확대 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인정 도서로 전환된 전문 교과 도서 개발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 도서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이를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심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의 도서 심사 업무 폭주, 심의 업무와 관련한 전담 기구의 부재, 시·도 교육청별 인정 도서 심의 절차 비표준화 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은 학습 및 교수법을 연구하고 각 교과 연구회 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시·도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전문 교과 인정 도서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개발하여 인정한 전문 교과의 교과서가 동일 분야라고 하더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활용되는 기술과 장비 등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과목명의 교과서를 시·도 교육청별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중복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 교과서의 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요되는 예산은 국정 도서 편찬 예산보다 더 투입될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과서 담당 조직과 담당관들 간의 가칭 ‘시·도 교육청 간 도서 협의 협력 위원회’를 신설하여 상호 간의 도서 관련 정보 교류와 도서의 공동 개발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 교과 인정 도서 개발비의 현실화를 통해 개발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정 보완 비용의 상응을 통해 도서 개발 후에도 교과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는 인정 도서로 전환된 전문 교과 교과서의 개발비가 국정 도서 개발비만큼 지원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정책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 교과 인정 도서 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서 연구 개발비, 심사비 및 저작권 보상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시·도 교육청에 배분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 교과를 교수 학습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전문 교과 인정 도서 발행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장의 자유 경쟁 원리에 의해 시스템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방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전문계 고교의 전문 교과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정 도서 개발 비용을 검정 도서의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여 현재 2도로 되어 있는 전문 교과서를 보통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4도(원색)로 편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 교과서의 개발 예산에 실습 소재 개발비 등을 추가하고, 개발 기간도 현행 국정 도서처럼 1년 6개월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 교과 인정 도서 연구 집필진으로 과목별 현장 교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이 저작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원고비 외에 승진 가산점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점수를 부여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정도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 작업을 하더라도 임기가 해당 도서의 심의 기간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제한하게 되면 심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관련 업무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어려워 비전문화, 비전문화 지속성 결여가 우려된다. 검정 도서의 경우 재택 심사 및 협의회 등의 작업에 대한 수당을 모두 고려하여 10~30만 원을 주는 데 반해 인정 도



전문 교과 인정 도서 개발비의 현실화를 통해  
개발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정 보완비의 상상을 통해 도서 개발 후에도 교과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서의 심사 수당의 경우 S교육청의 경우 3~5만 원, K교육청은 5~7만 원 등 소액의 심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은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심의 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인정도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결원이나 부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대안을 명시하여 심의 업무가 지속성을 가지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의 위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므로 이를 ‘인정도서심의회 교육 규칙’에 규정하여 안정된 예산 확보 및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도서 개발 및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전문 교과 인정 도서의 교과목에 대해 전문성 있는 연구 개발 기관의 선정과 심사를 위하여 교원, 산·학·연 협의체, 학회, 대학 기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인력 풀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정 도서의 경우 교과교육연구회와 여러 기관의 컨소시엄도 참여가 가능하여 집필 대상의 범위가 넓으므로, 인정 도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교사들의 교과교육연구회, 교사협의회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교수·학습 방법 및 보조 교재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원과 교과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별 모니터 요원 운영을 통한 전문화된 의견을 수렴할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 서비스(CUTIS)를 이용하여 시·도 교육청과 출판사는 인정 도서 발행 후 교과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올리고 오류 신고를 통하여 들어온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 교과 인정 도서의 전문화를 위하여 특정 교과목에 대한 전문 출판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인정 도서 인정 신청권자로 지정해 주어 교과용 도서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 교과 인정 도서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인정 도서 업무 처리 규칙과 지침의 표준화를 통해 전문 교과 인정 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의 합리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인정 도서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인정 신청권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신청 서류의 표준화로 전문 교과 인정 도서 심의에 대한 합리화와 이를 통한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 교과 인정 도서 심의 지침 및 규칙을 표준화하여 각 시·도 교육청별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전문 교과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가치를 수용하고 지역 사회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의 전환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에서 전문 교과를 국정 도

서에서 인정 도서로 발행 체제를 전환하여 개발할 경우, 교과서 내용의 질과 외적 체제 모두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 교과 인정 도서의 지속 가능한 질 제고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정부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교과서 관련 정책과 실행 과정을 보면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한다는 명분 아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기 위한 역설적인 방안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국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전문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 지향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도 있겠지만 흘러온 교과서 정책과 실행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고 꼼꼼히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 교과와 교과서는 해당 분야의 예비 전문가를 중등 단계에서 양성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교수 학습 자료이며, 그 나라 전문 직업 교육의 수준과 교육 방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이용순(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 편찬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과서특임센터 내부 자료.
- 조난심 외(2004). 초 중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서.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 1) 국정 도서는 저작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도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편찬하거나,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도서이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 교과서의 대부분이 국정 도서이다. 검 인정 도서는 민간에서 개발하는데, 일부 인정 도서는 시 도 교육청에서 개발하기도 한다. 검 인정 도서는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로 구분되는데, 민간에서 개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 심사를 받아 합격된 도서를 검정 도서라고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정 심사를 받아 합격된 도서를 인정 도서라고 한다. 현재 검정 심사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인정 심사 업무는 시 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이용순, 2009).
- 2) 검정 도서는 각 출판사에서 집필진을 구성하여 개발을 한 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 심사를 받아 합격한 교과서에 한해서 각 학교에서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수요가 많은 중 고등학교 보통 교과서의 대부분이 검정 도서이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 중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수정 고시(2007. 8. 7., 2008. 8. 28.)'에서 '검정 도서'로 수요가 많은 공업 계열 전문 교과서 3종과 상업 계열 전문 교과서 11종이, '인정 도서'로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공업 계열 3종과 상업 계열 11종이 지정되었다.

## 인정 도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위한 과제



문홍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 I. 교과서 선진화 정책과 인정 도서 체제 전환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 1월 12일 “창의적인 ‘신지식’ 제공 및 학습자 친화적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교과서가 국가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도구로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지식이 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가 필요하게 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증가와 함께 ‘교과서를 따분하고 재미없는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도 가지게 했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등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적시에 반영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알맞은 선진형 교과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국·검정 위주의 교과서 체제에서 학습자 친화적인 인정 중심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교과서 선진화에 따른 인정 도서의 확대는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국정 도서 145종(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과 검정 도서 39종(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과목의 선택 과목) 등 총 184종의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고,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식과 흥미,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정 도서는 국·검정 도서에 비해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교과서 개발 채택 수정 등이 보다 유연하고 학습자 친화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비교적 간편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교과서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인정 도서가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 주는 교과서로서의 최소한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II. 현행 인정 도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및 고도화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대한 요구가 교과서에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교과서 발행 제도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인 인정 제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 도서 제도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재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재량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획일적 교과서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 학교에 교과용 도서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단위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국정 도서 고교 선택 과목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및 교과서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인정 도서로 전환할 계획이며, 초 중 고교 지도서도 모두 인정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초등 국 검정 지도서 등만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게 된다.

2010년 인정 전환 대상 교과목 비교표

학교급	국정 → 인정	검정 → 인정	인정 추가	현행 유지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초		초등 5, 6 영어 학생용 전자 저작물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용 전자 저작물 영어 3/4/5/6 4종</li> <li>• 교사용 전자 저작물 영어 3/4/5/6 4종</li> </ul>	
중			진로와 직업(신설) 1종	지도서 37종
고	농업 경영 등 전문계고 101종 특목고 44종 총 145종	과학(9), 기술 가정(6), 체육(3), 음악(2), 미술 (3), 외국어 (5), 한문 (1), 원가 회계 등 전문 교과(8) 총 37종		교과서 159종 (외국어12종 포함), 지도서 39종 총 198종
총계	145종	39종	9종	235종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 활동'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특별 활동 지도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음.

그러나 현행 교과용 도서 인정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거나 심의가 필요 없는 인정 도서에 이르기까지 연구 개발 전문 인력과 질 높은 심의 기관 및 심의 인력 부족 등으로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국 검정 도서보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질이 높아야 하나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정 도서는 내용의 질과 관련된 내적 체제나 외형, 인쇄, 분량, 가격 등 외적 체제에서도 개발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며, 교과서 발행비의 증가로 그 발행 주체인 시 도 교육청의 부담 증가도 현실적인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인정 도서 심의 기준 및 인정 승인 등이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시 도의 자율성은 보장되었다고 하나 인정 도서 업무와 심의에 대한 규칙 및 지침이 각 시 도 교육청별로 다르고 인정 방식이 표준화되지 못하여 인정 도서 질 관리의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인정 도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나 시 도 교육청의 인정 도서의 질 제고를 위한 보다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인정 도서 업무 처리를 위해 심의 절차와 기준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정 도서의 개발 및 활용의 자율성, 다양성, 독창성, 수요자 요구 수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교과서 개발에 대한 현장 교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 인정 도서 개발과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인정 도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과정 중심 학교 체제에 적합하며,  
학생의 학습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가 개발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Ⅲ. 인정 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를 위한 과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인정 도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과정 중심 학교 체제에 적합하며, 학생의 학습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가 개발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 인정 도서도 국 검정 도서처럼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로 개발되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e-교과서 체제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항상적 질 관리로 학교 수업용 교재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1. 학습자 친화적 인정 도서 개발

**첫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과 교육과정의 반영으로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충실한 내용 선정과 교수 학습 방법의 제시,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심화 보충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인정 도서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상세화, 구체화 자료로서의 적합성이 제고되고, 교육과정의 목표 구현을 위한 주된 자료의 성격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인정 도서로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한 자료의 성격과 교수 학습 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구성 및 다양한 교육 매체 활용이 가능한 현장 친화적 교수 학습 과정 중심 인정 도서로 개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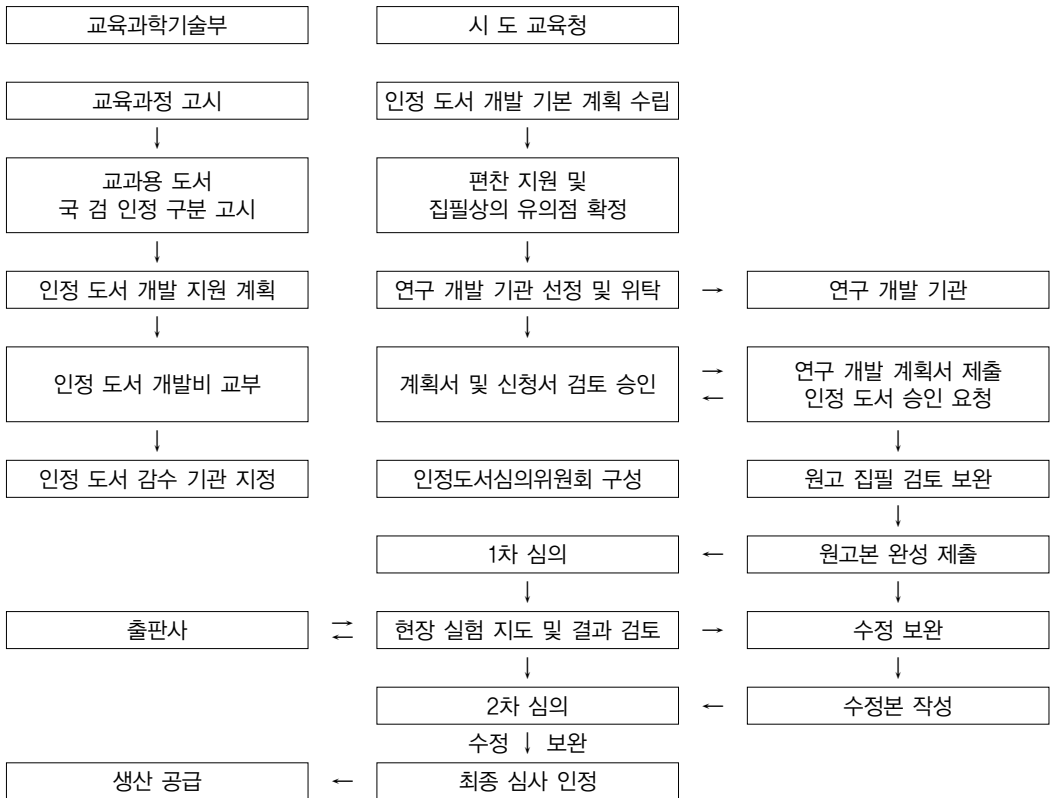
**셋째,** 학생의 개인차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통합적 사고력을 중시하고,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성과 유용성을 담보하여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흥미와 동기 유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구성과 직접적 체험을 중시하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인정 도서로 개발되어야 한다.

#### 2. 인정 도서 개발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 체제 구축

국정 도서에서 인정 도서로의 전환은 사회 및 산업의 변화,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수요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특성에 맞는 지역화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인정 도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정 도서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정 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연구 개발비, 심사비 및 저작권 보상비 등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인정 도서 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지역 및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인정 도서 편찬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 있는 연구 개발 및 자문 심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필요한 인정 도서의 개발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 도서 개발 역할 분담 체제(안))

### 3. 인정 도서 개발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신장

오랜 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 체제하에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진 교육 현장에서는 사회 변화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창의적 인간 교육을 위해 다양한 인정 도서가 필요함에는 절대 공감하면서도 스스로 개발하여 활용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아직도 필요한 도서를 선정하여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아직 인정 도서 개발에 참여해 보지 않았거나 교과서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정 도서의 다양화와 교과서 발행 및 제공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인정 도서 개발 인력을 양성하여 인력풀을 구축하고 해당 관련 분야 인정 도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 도서 개발 인력 확보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연구 기관에 전문 연구 과정을 개설하여 연구 집필진의 교과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원, 해당 과목 담당 교사,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연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개발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정 도서 개발에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경우 원고료 외에 승진 가산점 등의 연구 점수를 부여하여 도서 집필에 대한 열의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인정 도서의 질 제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 4. 인정 도서 심사 요건의 강화

인정 도서의 경우 그 범위가 넓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질 높은 인정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인정 도서 확대에 따른 각 시·도 교육청에서의 도서 심사 업무가 폭주하고, 심의 업무를 전담할 기구나 인력도 부족하여 현재의 인정 도서 심의 체계의 보완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인정 도서 업무 처리 규칙과 지침의 표준화를 통해 인정 도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여 심의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에서도 인정 도서로 전환된 도서를 중심으로 감수 기관을 선정하여 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되는 도서 및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전문 교과와 자체 개발하는 인정 도서나 인정 승인을 요청한 도서의 감수 심의 위원 추천을 지원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도 인정 도서 감수 기관 지정 및 심의 전문 인력풀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인정 도서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인정 도서의 발행과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정 승인된 인정 도서를 NEIS에 신속히 등재하여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도서를 주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인정 도서의 감수 심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정 도서의 심의 절차와 심의 지침 및 규칙을 표준화하고, 학습 및 교수법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시·도 연구 정보원에 인정 도서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5. 인정 도서의 향상적 질 관리 체계 운영

인정 도서 발행자들은 한번 공급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미흡한 편이며, 교과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통로도 미비한 편이다. 따로 제도화된 대책도 없어 교과서 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낭비적 쟁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교과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용 교재의 책무성 확립을 위해 교과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과서 모니터제’나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인정 승인을 하는 ‘정기 인정 심의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교과서를 개선하는 데는 교원, 학생, 연구 집필진, 편집진, 학부모 등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과서를 개선하는 지름길은 이를 사용해 본 교원과 학생들로 하여금 단위 주제 차시별로 일정 인원을 지정해 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교원 및 학생 교과서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여 가르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발행사나 연구 개발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정 도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2010. 1. 12.).
-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2010. 4. 14.).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과용 도서 제도 선진화 구현 워크숍(2010. 3. 25.).
- 전라북도교육청(2009). 인정 도서 업무 처리 지침(2009. 7. 2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초·중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우리나라 교과서 인정 제도 개선 과제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



### I. 현 정부의 인정 도서 확대 정책

지난 1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현 정부의 교과서 관련 국정 과제의 완결판이라고 할 만하다. 현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학교 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하위 항목에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가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 방안 중의 하나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민간 및 교원의 참여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 방안을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를 민간이 발행하는 검정 도서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 도서 확대’ 방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바로 국정 도서를 검정 도서로, 그리고 국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핵심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왜 국정 도서를 검정 도서로, 그리고 국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하여 다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돌아가 보자. 2010년 1월 12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배부한 보도 자료를 보면,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는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런 부제 아래에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3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정 도서 대폭 확대로 인정 절차만 거치면 시중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약하면 현 정부는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중의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활용 가능하도록 인정 도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인정 도서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국정 도서 145종(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과 검정 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국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국 검정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둘째, 향후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과서를 모두 인정 교과서로 전환할 계획이며, 초·중·고 보통 교과와 경우에도 인정 교과서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국 검정 도서의 인정 도서로의 전환, 즉 인정 도서의 확대이다. 이번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우리는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다수자의 지위를 점해 왔던 국 검정 도서보다 인정 도서의 중수가 더 많아짐으로써 드디어 선진국형 교과서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번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추구하는 인정 도서 확대 방안이 얼마나 혁신적이며,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기별 국 검 인정 교과서 중수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정 도서가 가장 많은 중수를 차지하였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정 도서가 가장 많은 중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 II.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나타난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나타난 인정 도서 확대 방안은 일단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국정, 검정, 인정제로 옳아 감에 따라 교과서 개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줄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교과서의 연구 개발에서 국가의 개입은 줄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인정 도서의 확대는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정책으로, 즉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개발에 민간 및 교원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정 도서 확대 방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도입의 근거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에게 산지식을 제공하려는 것, 둘째,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것, 셋째, 민간 및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 이들 세 가지 동기를 엮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 및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산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정 도서를 확대한다.' 이렇게 볼 때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인정 도서를 확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에게 산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차 전략으로 민간 및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2차 전략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정책 도입의 이유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국정을 인정으로 전환할 경우 각 교과목별로 다종의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에 분명 민간 및 교원의 참여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국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해당 정책의 목적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을 분석해 보자. 먼저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는 정책은 어떠한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정과 인정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정과 인정의 차이는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현재의 논의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검정과 인정 모두 민간이 개발하고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검정 도서의 경우 정부가 승인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하여, 인정 도서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서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수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검정 도서에서는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하여, 인정 도서에서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검정 도서의 개발에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나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의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처럼 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국정 도서나 고교의 과학, 음 미 체 등의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번에 새롭게 인정 도서화된 교과목 영역에서 인정 도서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해 보자. 시장성이 있어 보이는 고교 과학 등의 선택 과목, 즉 보통 교과에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 검정 도서처럼 다종의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성이 없어 보이는 대부분의 전문 교과목에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급 기관에 교과서 개발비를 지원하면서 교과서 개발을 독려할 것이다. 이 경우 전문 교과서는 인정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다종이 개발되기보다는 각 교과목별로 1종씩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사고 실험에 따르면 인정 도서의 확대가 원래 의도한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

해 예측 가능해 보인다. 고교 과학 등 보통 교과와 고교 과학의 경우 검정에서 인정으로 바뀌었지만 단위 학교 입장에서 볼 때 ‘학교 밖 심사’에 합격한 교과용 도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검정에서 인정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차이가 미미해 보인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 심사가 대부분 검정 심사의 기준이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정에서 인정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주체가 국가 수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청 수준(각 시·도 교육청)으로 바뀌었다는 점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국정 도서로 개발되어 왔던 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과서를 인정 도서화하는 정책은 어떠한가? 전문 교과는 대부분 시장성이 없어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의 예산 지원하에 하급 기관들에 의해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발행 정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이전과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정 도서로 전환된 대부분의 전문 교과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하에 개발된 인정 도서 1권 외에는 별도의 인정 도서가 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고교 과학 등 보통 교과이든 특수 목적 전문계고의 전문 교과이든 간에 인정 도서를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달성하려고 했던 정책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국 검정 도서의 종수를 줄이고 인정 도서의 종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의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선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제안된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은 정책 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심층적 분석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고교 과학 등 보통 교과와 고교 과학의 인정 전환 정책과 전문 교과와 고교 과학의 인정 전환 정책으로 나누어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고교 과학 등 보통 교과를 인정 도서화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특히 인정 심사에서 검정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는 상황에서 검정 도서인 고교 과학 등을 인정 도서화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고교 과학 등은 검정 도서로서 이미 교과목별로 다종의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에 민간 및 교원의 참여가 이미 충분히 확대되어 있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화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컨대, 검정 도서인 고교 과학 등 보통 교과를 인정 도서화한다고 해서 교과서의 질이 현재보다 특별히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국정 도서인 특수 목적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를 인정 도서화하는 정책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적어 시장성이 없는 교과를 인정도서화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 교과를 인정 도서화해도 민간 출판사들이 인정 도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정부가 개발비를 보조하여 각 교과목별로 1종씩의 인정 도서를 개발하도록 한다면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의 목적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전문 교과가 인정 도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목별로 1종씩의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에 민간 및 교원의 참여가 확대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연유로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화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요컨대, 국정 도서인 전문 교과를 인정 도서화한다고 해서 교과서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요컨대,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인정 도서 확대라는 정책의 좋은 의도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정 도서의 확대를 통해 상기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인정 도서 확대라는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의미를 지니려면 어떻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정부가 국 검정 도서의 종수를 줄이고 인정 도서의 종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의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선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우리나라 인정 제도의 발전 방안

교과서는 학생들의 의식, 가치, 태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특수한 종류의 도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정, 검정, 인정제처럼 각 나라마다 자국의 역사나 정치 체제 등의 맥락에 적합한 교과서 심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최근 들어 세계 평화가 정착되고 시민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과서 개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1980년대 말에 동서 간의 이념 대립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의 사라졌다고 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의 북유럽의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에 교과서 검 인정제를 자유 발행제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검 인정 제도를 활용하다가 국가의 개입 자체를 배제하는 자유 발행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검정제를 시행하다가 인정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검 인정제를 시행하다가 자유 발행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과서 선진화 정책이 추구하는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그리고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이 교과서 선진화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제시된 인정 도서 확대 방안은 해당 정책의 목적 달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정 심사가 검정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어느 한 교육청에서라도 인정 심사에 합격한 인정 도서는 다른 시 도에서 별도의 인정 심사 없이 인정 도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 예상되는 두 가지 부작용만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 심사가 국가 단위에서 진행되는 검정 심사보다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정 도서의 질이 검정 도서의 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장성이 없는 인정 도서의 개발은 대부분 현장 교사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과서 인정 심사의 경험이나 조직이 탄실하지 못한 교육청 차원에서 인정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또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과서 인정 제도는 어떻게 개선 내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에 해당 정책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처럼 검정과 인정 심사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다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화한다거나 시장성이 없는 국정 도서를 인정 도서화하기 위해서는 검정 심사제와는 확실히 다른 인정 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요컨대,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제안하는 인정 확대 정책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과서 인정 제도를 검정 제도와 확실히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인정 확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인정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세 가지 대안을 간략히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밖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정 교과서(특히 고교 과학 등의 보통 교과)의 경우 인정 심사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인정 심사는 검정 심사의 기준이나 절차를 준용하기보다 검정 심사보다 훨씬 단순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심사 불합격을 두려워하여 창의적이거나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현상을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 교과의 경우 교과서 인정을 교육청 차원이 아닌, 단위 학교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산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명기할 경우 시·도 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과서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일명 ‘심의 없는 인정 도서’라고 불리는 인정제의 경우 당해 교과목의 교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유 발행제에 근접한 인정제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산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 교과의 교과용 도서를 모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잘 알다시피 전문 교과는 각 교과목별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과 직결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의 변화 또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 교과의 교과서를 국가가 모두 개발해 줄 필요가 있는지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정으로 개발되는 전문 교과의 교과서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전문 교과의 교과서를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개발하거나 시중의 관련 서적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예컨대,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담당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일정 시간(예컨대, 주당 4시간 정도) 감축시켜 주되, 그 대신에 그 시간 동안 교재를 스스로 개발하거나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개발된 교과서를 활용하기보다 교사가 직접 필요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교사에게 주당 4시간에 해당하는 교과서 개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사가 개발한 자료는 인터넷 플랫폼에 올려 모든 교사들이 개발된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부터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개발하거나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신에 교과서 개발에 해당하는 수업 시수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교과서 선진화의 길

2010년의 우리 교육계는, 현장 교원들의 깊은 고민과 함께 급속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면의 변화만 하더라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 정책이 발표되거나 이미 발표된 정책이 올해부터 적용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초·중등 교육 현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과서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0. 1. 12.)도 그러한 정책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몸담고 있는 몇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교과서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하였다. 본지의 이 시도는, 우리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 내용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대담에 협조해 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시: 2010년 4월 3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회의실

참석자: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수)

김혜원(양동중학교 교사)

조성준(금성출판사 실장)

김태훈(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장)

사회: 김만곤(본지 편집기획위원장)

원고 정리: 유순기(한국교과서연구재단 본지 담당)

사진: 박동규((주)미래엔컬처그룹)

사 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1월 12일에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우리 교과서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찬동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과서의 발전상과 수준, 비전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 현장, 출판사, 학계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우리 교과서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선진화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과서의 선진화는 이러한 입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태훈: 교과서는 그 나라 교육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우리 교과서 정책은 그동안 국 검정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되다 보니 학교 현장의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통하여 학습 수준에 따라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므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교과서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로 유통 체제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동 발행제나 이익금의 균분제는 점차 폐지하고 가격 자율화나 개별 발행제를 도입하여 교과서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여 교과서 시장의 경쟁 체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검정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는 검정으로 가급적 전환하고 국정 및 검정 교과서는 인정 전환을 확대하며 검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정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통하여  
 학습 수준에 따라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므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교과서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학, 과학의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에도 위탁하고, 역사 교과서는 검정과 별도로 검정 후에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학교가 선택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과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교과서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외형 체제와 가격이 자율화되면 교과서는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질과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를 물려주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교과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의 연구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 회: 이 문제에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신 홍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후조: 교과서 정책의 선진화도 결국 가장 좋은 수업용 교재를 교사와 학생의 손에 들려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에 대해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국정이 검정을, 검정이 인정을 따라 달라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규제가 풀린 인정이 가장 좋은 교과서였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전통을 보면 국정에서 검정, 검정에서 인정으로의 전환 방향이 곧 선진화 방향이라고 최소한 당분간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업과 학습에 잘 쓰이지 않는 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령 특정 학년의 미술 교과서를 연구 개발 보급하는 데 20억 원 이상 들 것입니다. 그렇게 보급된 교과서는 수업이나 학습에 별 도움이 못 됩니다. 교과서가 수업과 학습에 거

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제별, 유파별, 작가별, 시대별 화첩이나 도록을 만들어 미술실에 비치하는 것이 학생들이 들추어 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서가 오히려 출판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 종류의 주제별 강목별 동 식물도감이 과학실에 보급되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 점에서 교과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학교 현장의 교과서 사용 실태를 대적으로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1교과 다책주의에 따라 다양한 보조, 보완 교재들이 개발 보급되었지만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알아보아 그렇지 않으면 보조 교재의 핵심 내용을 본책으로 흡수하고 보조 교재는 폐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학습과 수업에 더 도움이 되는 교과서 발행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사 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대해 “많은 지식이 요약 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미래의 창의적인 ‘산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러한 자체적 평가가 객관적이라면, 이는 매우 고무적이고 의욕적인 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발표되는 내용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 개편 시기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도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태훈:** 교과서 개발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편수사에 대한 자료를 살펴 보면 교육과정기별 새로운 편찬 발행 모형을 시도했고 이를 통해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수학 영어)/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용 도서 개발 과정 역시 교육과정 개정이 예상되는 시기부터 편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차기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기본 계획의 근간을 준비했습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시대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서 개발 방향의 정립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과서 정책도 교육 개혁의 큰 틀 속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교과용 도서 체제 전반의 선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는 기 발표한 정책 방향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와 업무 체제 등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성준:** 흥미롭고 동기 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선진형 교과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방은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술해 보자는 것입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법과 추진 속도면에서 수궁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령, 국 검정 도서 축소 및 인정 도서 확대의 경우, 제도를 바꾸면 추구하는 교과서가 편찬될 거라고 생각하였다면 큰 오산입니다.

금번에 인정화된 교과서의 대부분은 검정의 경우 고등학교 선택 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등 소위 개발 참여도가 높은 교과목은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교과목이 인정화되었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경우는 전문 교과에 한정되었습니다. 국정에서 인정화되는 도서는 전문 교과서 출판사의 참여가 거의 없을 것 같고, 검정에서 인정화된 도서도 제7차 때보다 참여도가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교부금(책당 4천만 원)의 일부가 출판사의 몫으로는 너무 적은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는 인정 도서의 수익성 및 판매 매커니즘, 교육과학기술부의 가격 억제 정책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서는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목 단위로 교육청을 지정하여 교부금을 책당 4천만 원씩 배부하였습니다. 검정의 경우 인정화시키지 않았다면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교부금의 몇 배를 투자하여 교과서를 개발하였을 것입니다. 이 책의 질이 교부금으로 만든 것보다 질이 더 높지 않을까요? 금번 교과서 제도 변화는 출판사의 참여 의욕과 교과서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과서 다양화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들면, 검정 교과서와 짝하는 지도서 인정화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이 성공하였다고 자평할는지 모르겠으나 출판사는 깊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발행 부수 400부의 지도서(교과서는 2만 부)의 권당 개발 단가는 보통 30만 원을 상회하는데, 출판사가 책정한 단가는 2만 원 남짓합니다. 정말 사업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출판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이윤이 많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한다면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지도서를 만들지 않을 경우, 얼마 안 되는 교과서 발행 부수가 줄어들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되며,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 보는 행위를 한 겁니다. 수많은 출판사들은 결국 병이 깊어져 교과서 시장을 떠나거나 개발 규모를 크게 축소할 것입니다.

국 검정 도서 축소 및 인정 도서 확대는 매우 성급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튼실한 연구와 조사가 밑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형 교과서는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 교과서 제도를 따라 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 교과서 편찬 전통, 가격 조건, 교과서 편찬-판매-공급 매커니즘 등에서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알맞은 모델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서책형 교과서가 지닌 한계를 벗어나고, 매체 통합형 교과서를 기획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며,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에 더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선진화의 내용은,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CD 형태의 e-교과서 보급,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국정 도서 145종 및 고등학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검정 도서 39종 등 국 검정 도서 184종의 인정 도서 전환, 그리고 검정출원 기관 확대, 개방형 재택 심사제 도입과 검정 심사 과정의 공개, 출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권고,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 비리 근절 및 교과서 선정, 채택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 마련 등 검정 도서 관리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 내용을 보

면, 검정 도서 관리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을 만큼 특별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의 실현을 통해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유념할 점이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태훈:**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지식, 흥미,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정 도서를 점차 확대 전환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검정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인성과 같은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정책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직접 학생의 흥미와 적성 능력 등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보다 전문성을 신장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교과서는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조성준:** 검정 교과서의 경우, 학생 친화적 선진형 교과서 태동의 주체는 출판사입니다. 출판사는 이윤을 먹고 자라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윤이 곧 투자 목적입니다. 출판사의 의욕적 투자는 결국 ‘질 높은 교과서’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출판사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교과서 합격 중수는 얼마나 많은지 파이가 산술적으로 작아져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출판계가 크게 요동하고 있으며, 당장 2010년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검정 및 인정 도서 개발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상황’이 올까 봐 우려됩니다. 184종의 인정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했고, 고액의 심사 수수료가 차치하더라도 개방형 채택 심사로 심사 기간이 길어져 그러지 않아도 짧은 다음 학년 교과서 또는 지도서 개발에 인적 물적 경제적 하중이 크게 걸릴 것입니다. e-교과서도 일부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중소형 출판사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입니다. 또, 검정 도서 관리 강화는 소량 부수를 발행하는 대다수의 발행사에게 인건비 부담이라는 하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정 공고는 왜 그리 잦은지. 이러한 정책이 출판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교과서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근래의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출판사의 현실 사이를 급격하게 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나는 갈 테니, 올 사람만 와라!’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연구에 터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철저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쳤던  
 국 검정 교과서에 비해 인정 도서는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연구진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와 출판사가 주도하여 급조한 소수 개발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과서의 수준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변화가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안정화, 제도의 예측 가능한 운영이 학생 친화적 선진형 교과서 태동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원:** 교과서가 다양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러한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는 일이 우리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자칫 교육 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철저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쳤던 국 검정 교과서에 비해 인정 도서는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연구진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와 출판사가 주도하여 급조한 소수 개발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과서의 수준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높은 연구진의 노력에 의해 어렵게 만들어진 검정 교과서에서조차도 난이도 조절이 잘되지 않는 문제, 내용이나 발문에서 크고 작은 오류들은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검정 교과서보다 심사 기준이 더 느슨하게 적용되는 인정 교과서가 많이 확대된다면, 이러한 문제점 또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라는 의미가 자칫 외형적인 변화로만 해석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됩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국정에서 검정으로 새로이 출판된 교과서들을 보면, 가장 큰 변화는 화려해진 외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가 편집과 디자인에서 학생들의 감각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힘이 약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경쟁적으로 외양 꾸미기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외양이 정작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홍후조:** 검정 도서의 합격 종수가 지나치게 많아 채택과 관련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에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다수가 다단계로 공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선정이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 중앙 수준 검정, 시·도 수준 추천을 거친다면 학교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소수가 폐쇄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검정 교과서의 합격 종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교과서의 합격 종수가 10종을 넘어서면 국가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보면 과잉 투자이고 낭비입니다. 합격 종수의 제한은 출판사에게 주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화를 지향한다면 합격 중수의 제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정 교과서의 전문 출판사가 없는 상태에서 선부른 인정화 확대는 교과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 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에 국어, 영어, 수학 교과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책형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무거운 책가방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용 모바일 형태로 발전시킴으로써 각종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보다 친밀한(friendly) 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장이나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혜원:** CD 형태의 교과서가 꼭 필요한가,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꼭 긍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종이 교과서가 없어서 e-교과서를 사용할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e-교과서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감상용 책이 아니라 학습용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설과 같은 감상용 책은 읽는 행위로만으



로도 충분하지만 학습을 위해 읽는 학습을 위한 읽기에서는 주요 내용을 메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강의 내용 중에서 핵심을 찾아 메모한다든가,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해 간단한 표시를 하는 것 등 교과서는 공부의 결과가 다양한 방법으로 메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유자재로 메모할 수 없는 그런 교과서라면 별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교과서가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교과서를 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컴퓨터로 이끄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에는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방해 요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혹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에서 실제 발음을 들려주는 부분, 국어에서 시나리오나 드라마 같은 매체 단원의 자료, 과학과에서 실험 과정을 직접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 등은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실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홍후조:** 저도 김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책의 보조 교재로서 e-book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실험, 실습, 실기 등에서 직접 경험이 어려운 가상 경험이 필요한 상황을 재현한 e-book은 보조 교재로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과 학습을 탄 데로 인도하는 요소가 다

분하면서도,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사용 가능하지 않는 교과서는 곤란합니다. e-book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의 가장 잘된 단일종 교과서로 시장이 획일화될 수 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볼 때 수리와 유지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리 바람직한 대안은 못됩니다.

**김태훈:** 앞으로의 교과서는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무거워진 책가방을 휴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e-교과서의 개발 보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위해 개발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는 다매체 시대에 사용하기 편리한 e-교과서를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보급하게 되며, 우선 PC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점차 e-book이나 아이패드 등 다양한 단말기에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e-book 전자책 시장은 초기 단계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하여 점차 기능면이나 내용면에서 확대되리라 봅니다. 아마존 킨들, 아이리버의 스토리, 삼성전자 파피루스 등은 이미 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후조:** 참고서가 필요 없는, 내용이 풍부한 두꺼운 교과서는 독서백편의자현식(讀書百遍義自見式)으로 공부하는, 읽고 또 읽고 외울 정도로 공부하는 상황에서 그리 바람직하게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등 학교 교육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제한된 핵심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도 읽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시중에 데이터, 정보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이 교과서 내로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여 교육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 중등 교육은 취사선택된 정설화된 지식을 전수하는 면이 중요합니다. 가짓수를 많이 하거나 내용이 많다고 하여 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인지적 과부하는 뇌 발달에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으로나 종류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은 도서관에서 구할 일이지, 책가방 속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진해서 종횡무진으로 이것저것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핵심도 방향도 못 잡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과서가 시중의 책, 도서관 책을 대체해야 한다는 욕심은 줄여도 됩니다. 시중의 일반 책과 달리 교과서답다는 것은 당분간 동양적 전통에서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 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 교과서로 전환하고, 초 중 고 보통 교과의 경우에도 인정 교과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로써 국 검정 교과서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교과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히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

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 주는 수준별 맞춤 수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고무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체제를 인정 도서 중심 체제로 바꾼다는 표현은, 초 중 고 보통 교과까지 인정 교과서로 전환할 경우 가능한 표현이며, 그러한 변화는 그야말로 교과서 제도의 일대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성준: 인정 도서의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예측해 봅니다. 먼저 대량 부수의 인정 도서는 출판사에 매우 매력적이어서 투자 능력, 영업력, 교과서 개발 경험 및 능력, 축적 자료, 전문 편집인 등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일단 시장의 판매 구도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점차 경쟁력이 약한 출판사는 도태되고, 소수의 대형 출판사 위주로 시장 구도가 고착되리라고 봅니다. 소량 부수의 인정 도서는 규모 있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외면으로 결국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주도의 도서 개발 및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큰 미국이나 교과서 수출 비중이 높은 영국과 같은 국가라면 몰라도, 우리의 실정에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다만, 교사의 인정 도서의 자체 제작 참여도가 높아져서 건수가 많아지고, 일반 서적의 교과서 사용에 대한 홍보가 충분해지고,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면 일부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혜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처럼 특정 교과서 하나를 교재로 사용하여 수업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정 교과서를 확대하는 취지는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진 다양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재를 재구성하라는 의미일 테니까요. 이제 각 학교는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 또는 해당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추어 교재를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맞춤식 교육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는 반드시 먼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 역량의 강화입니다. 각종 상황을 고려한 맞춤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교사가 담당해야 할 몫이고,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대폭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재 구성에 있어서 교사가 거의 소외되어 왔던 그동안의 방식에 비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 교재 위주로 수업 연구를 해 왔던 교사들에게 교재의 재구성 과정은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 개개인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교사들이 교재의 재구성과 수업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잡무 경감 등 연구 시간을 확보를 위한 지원과 경제적 지원과 같은 것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환경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인정 교과서의 확대는 우리의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후조: 앞서 언급한 대로 인정 도서 확대만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중의 질 높은 미술 도감, 화첩을 미술 교과서 대신 사 주겠다는 것은 양호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도서 확대

가 무조건 새로 만들어서 인정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급조하여 만든 질 낮은 책에 값을 지불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험, 실습, 실기를 안내하는 책들은 전문 교원들이 지혜를 모아 매뉴얼, 팸플릿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교과서관(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교과서 성전관(聖典觀)은 교과서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 교육과정의 해석을 제한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하나의 자료'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들이 수업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 학습 자료,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수업 자료나 시중의 학습 자료 등이 교과서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사들의 교과연구 동호회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의 교과서 개발 역할도 강화되어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기능이 변화할 것이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 회: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인정 도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국 검정 도서의 인정 도서 전환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계기로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에는 더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와 교원들, 출판사 등 현장의 반응은 아직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조성준: 우선 국정에서 인정화된 교과목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과서 출판사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대개 소량 부수의 수익성 낮은 도서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정에서 인정화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과서 출판사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 출판사에서 냉담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책의 질보다는 치열한 영업 경쟁력에서 일부 대형 출판사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김혜원: 우리의 입시 제도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재로 공부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에 의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교사 입장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교재를 선택하는 데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맞추어 쓰이고,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검정 교과서들 안에서만 선택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이나 중등학교에서 인정 도서가 더욱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정 교과서에 대한 홍보나 정보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만을 사용해 왔던 교사들에게 인정 교과서 활용에 대한 연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교사 중에는 인정 교과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출판된 초·중등용 인정 교과서들이 정규 수업보다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대상

으로 한 것이 대부분인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의 교재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실정은 절대적으로 홍보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인정 도서가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인정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는지, 각각의 인정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 연수와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후조:** 교과서 선진국에서는 인정 도서가 가장 전문화된 소수 출판사가 책임지고 개발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인정은 국정, 검정에 이은 ‘3위’의 위상을 차지해 온 전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정 도서의 확대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편입니다. 자유로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품질 경쟁하여 가장 좋은 교과서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손에 들려질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이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인정 도서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확대하는 것은 교과서의 질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훈:** 국 검정 도서의 인정 전환 확대는 교과서 개발 정책이 그동안의 중앙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의 교원들은 교과서 편찬 개발에 대한 참여의 폭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출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교과서 정책의 변화는 교과서 개발에 대한 현장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이고, 출판사도 새로운 지식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신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 회:** 검정 교과서 관리는 교육과정 개정 차수별로 보면, 이번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계기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 교과서 출원이 가능해졌고, 종래의 폐쇄형 합숙 심사를 개방형인 재택 심사로 전환하고 심사 과정도 공개하게 되었으며, 민간 출판사 간 과열 출원 경쟁을 막고 전문 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개별 출판사가 교과목별로 1종만 출원할 수 있게 했고,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을 위해 합격 유효 기간제(5년)를 폐지했습니다. 또,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2011년 검정 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채택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출판사에 과징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 출원 제한 등의 처벌 규정을 초 중 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시 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다양한 참고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의무 교육인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교과서 채택 ‘권장 목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교과서 선정 및 채택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우리나라에서 인정은

국정, 검정에 이은 ‘3위’의 위상을 차지해 온 전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 도서의 확대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편입니다.

자유로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품질 경쟁하여 가장 좋은 교과서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손에 들려질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이라고 봅니다.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견해 또는 우리가 다 함께 유념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조성준: 먼저 개방형 채택 심사에 대한 견해입니다. 2010년 검정 교과서의 채택 심사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제도가 아니라 갑자기 등장,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의 장기화는 출판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심사 수수료가 많아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상급 학년 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 기간을 짧게 함



으로써 부실 도서의 원인도 됩니다. 2010년 중학교 2학년 검정 탈락률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심사 기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개별 출판사의 교과목별 1종 출원에 대한 견해입니다. 교과목별 1종 출원은 몇몇 대형 출판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대개 2개의 독립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1종 출원 제한이 큰 효과가 없으리라 봅니다. 특히, 주요 과목은 각각 2종 출원을 허용하였는데, 1개 출판사에 4종 출원을 가능케 합니다. 이 제도 시행 전후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셋째는 합격 유효 기간제의 폐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제도는 변화하는 것들의 교과서 적기 반영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불확실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4년의 정주기로 교과서 개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제도를 바꿀 만큼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은 출판사, 저작자 및 편찬 관련 기관의 안정적인 교과서 개발의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권에 따라서 마음대로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교과서의 안정적 개발, 사용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럭비공처럼 운영될 수 있는 이 제도보다는 유효 기간제의 설정, 유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넷째는 교과서 자율화 정책에 대한 견해입니다. 가격 자율화란 출판사 등이 교과서 가격을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에 터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 사전 심의’, ‘가격 조정 권고’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자율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시장이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교육장의 교과서 채택 ‘권장 목록’의 제시에 대한 견해입니다. 검정 합격한 도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주 다양한 평가 항목으로 엄정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자격을 갖춘 합격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평가하여 몇 종의 ‘권장 목록’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지역의 몇몇 교사가 평가원 수준만큼 심사할 수 있을까요? 또, 학교에서는 ‘권장 목록’을 참고만 할 뿐, 주체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권장 목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평가원의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선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권장 목록’이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 교육청 관계자나 관련 교사는 출판사의 집중 로비 대상이 될 터인데, 그 대상을 이전보다 대폭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김혜원:** 검 인정 교과서 확대가 출판계나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도 채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의 문제이고, 이번에 비리를 막기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다양하게 마련한 것도 그런 의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채택에 참여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채택의 부작용이 단지 비리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출판된 검 인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나치게 많은 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각 교사가 충분히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 바르게 선택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국어의 경우 처음으로 국정에서 검정으로 풀린 교과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무려 23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교과서를 제공한다는 검 인정 확대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1년 과정 총 4권으로 구성된 23종의 교과서의 수는 종합 92권이었습니다. 그것을 수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제2의 검정 과정의 부담을 교사들에게 떠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각 교과서별 홍보 자료도 비리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배포를 금지했고, 교사들의 답합을 막기 위해 교사 간 협의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교과서 선택이 수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사들은 철저한 분석 없이 채택 과정을 대충 치를 수밖에 없었습

앞으로 좀 더 정확한 판단에 따른 채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만 앞세우기보다  
각 교과서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의 제공은 물론,  
교사들 간에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판단에 따른 채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만 앞세우기보다 각 교과서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의 제공은 물론, 교사들 간에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후조:** 교과서 가격은 국민 세금으로 구매해 주어야 하는 초 중학교이든 학부모의 부담으로 구입하는 고교이든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언제나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데 교과서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경제력으로는 책당 3천 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3천 원 안팎의 교과서의 질에 대해 지나친 기대도 금물입니다. 마치 한 과목의 한 학기 교과서 가격이 3만 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질로서는 엄청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1년용이 아니라 다년용이고, 학생 휴대용이 아니라 학교 비치용, 학생 대여용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교과서 가격 부담에서 정부나 민간이 모두 벗어나려면 수업과 학습에 많이 쓰이는 것은 한정된 중수로 쌀값의 이중곡가제 하듯이 값싸게 학생에게 보급하고, 그렇지 않은 교과목의 교과서는 과감히 학교 비치용, 학생 대여용, 다년용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것입니다.

**김태훈:** 이번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이 한층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출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교과서의 개발과 심사, 채택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과서 채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채택 매뉴얼은 동료 교사와의 역할이나, 인근 학교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교과서를 보는 관점, 교과서의 평가 및 채택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 위주로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좋은 교과서 선정을 위해 적극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서 시장의 과열 경쟁 및 혼탁을 막고자 법률상 근거 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과서 선정과 채택과 관계하여 매년 비리가 이어져 왔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 회:** 교과서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는 장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임

니다. 로저 산크라는 인공 지능학자는 “지난 세기와 그 이전의 수많은 세기 동안, 교육은 정보의 축적을 의미했고, 대중이 생각하는 지성이란 자신이 축적한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았지만 그 사실들이 벽에 썩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50년 뒤에 지식은 그저 알고 싶은 것을 큰 소리로 말하면 즉시 벽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아직 교사와 교실과 교과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50년 뒤에는 거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교육의 개념을 바꾸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수능 성적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답을 암기하는 것이 지능의 증거라고 생각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켈런터라는 예일대학교 교수도 앞으로 50년 이내에 세계 대학의 95퍼센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초 중등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측은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의 어느 신문 칼럼은, “미래의 교실에서는 연필과 공책이 별도로 필요 없다. 칠판은 물론 분필도, 교과서도 볼 수 없게 된다.”면서 ‘매직미러’라는 매체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교과서 선진화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성준:** ‘교과서 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제도적 변화가 너무 급하고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추진된 ‘디지털 교과서’의 급속한 개발 과정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의 거대한 구호가 들리지 않습니다. 목표와 명분이 현실 여건을 견인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의 ‘교과서 선진화’ 추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의 개선 또는 개혁은 ‘현실’을 제대로, 충분히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 토대 위에서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야 함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명분 좋은 안을 먼저 내고, 여기에 현실을 꿰맞춰 이끌고 나가는 듯한 것이 현재의 양태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될 것도 있겠으나, 아닌 것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연구 검토하면서 탄실한 제도를 구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에는 ‘우보(牛步)’를 제안합니다.

**홍후조:** 교육이 단지 지식 전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게 베풀어지는 학교 교육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사회적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서 지식의 습득,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넘어 협동적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언급하신 매직 미러는 스마트폰의 미래적 형태이겠지요. 교육은 정보와 지식의 획득 이상을 지향하는 실제적인 복잡한 활동입니다. 교과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계기와 수단을 만들고 학교는 사회를 축소한 장소입니다.

**김태훈:** 1946~1947년 초 중등 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확정되어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과서 편찬 작업을 착수한 이래로, 국정 교과서 발행, 검인정 제도 도입,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마련, 2011년 e-교과서 발행까지 교과서 제도를 실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신념 하나로 묵묵히 교과서 편수 업무를 담당해 온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육 현장이 급속한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교과서 제도로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의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적 지식은 정태적인 관조적 지식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행적 지식과 균형을 이루어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교과서 정책도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기본 정신에 따라 전달된 지식의 단순한 수용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평가하고 선택하고 조직하고 활용하고 생산하고 재구성하는 데 관련된 능력을 중시하여 교육 선진화의 디딤돌로 교과서 제도가 가치 매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 회:**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열거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우리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 혁신적인 안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과서의 수준과 교과서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대담은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의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각 발언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나 다른 의견을 들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준비한 소주제를 열거하면서 전체적인 관점만을 들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논의는 앞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연구』지와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모처럼 마련된 이 대담을 지원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분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

## 우리 학교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글 | 권오실

남양주양지초등학교 연구부장



### I. 들어가며

2007년 9월에 우리 학교에서는 주변 교사가 학교 교육 계획에 나타나 있는 주 생활 목표를 전교사들에게 발표해 오던 관습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것들을 아이들이 발표하는 방법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우리는, 교육이란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 학교는 개개인을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설명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존의 학교 교육은 교육 행정 기관의 여러 가지 지침을 그대로 따르거나, 최소한 학교장의 학교 경영관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면 그만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에 대해서는 이론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학교 교육 계획(학교 교육과정)의 표지에 '학생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는 지표를 서슴없이 나타내었다.

2007년 9월 이후, 우리 학교는 '소리 없는 개혁'이라고 하면 좋을 변화를 겪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학교 경영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소신에 따라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차츰 그러한 변화가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일련의 변화인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교사들의 기본적인 관점을 흔들여 놓은 개혁이 되었다. 그것은 교육과정 중심축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옮겨진 변화였다.

### II. 생각 바꾸기

전통적인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은, 그 활동의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활동을 조직하는 등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각 교육 활동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수립한다. 그러므로 담당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 그 담당자가 계획을 세워 부장 교사-교감-교장에 이르는 결재 라인을 거치면, 그 학교의 교육 활동은 바로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마무리된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절약되고, 계획 입안자 한 사람만 고생하면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은 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그만인 활동이 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만든 100점짜리

2007년 9월 이후, 우리 학교는 ‘소리 없는 개혁’이라고 하면 좋을 변화를 겪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학교 경영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소신에 따라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차츰 그러한 변화가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일련의 변화인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교사들의 기본적인 관점을 흔들어 놓은 개혁이 되었다. 그것은 교육과정 중심축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옮겨진 변화였다.

계획보다 열 사람이 만든 70점짜리 계획이 낫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직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 협의회는 일체의 지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의이다. 이 전체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회의가 있다. 교육과정기획위원회이다. 업무 부장, 학년 부장, 관리자로 구성된 교육과정기획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 과정 연간 계획에 따른 월별 교육 활동에 대한 협의를 거친다. 이 회의에서 교사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별도의 전체 협의 안건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요 교육 활동들은 담당교사가 전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된다. 따라서, 주요 교육 활동은 담당 교사와 교장 교감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계획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전 교사의 참여 의식을 높인다.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할 전 교사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그 교육 활동의 목적, 방법, 절차, 세부 추진 내용, 평가 관점 등을 잘 인식하게 되므로,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시간의 낭비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 일처럼 참여하게 되므로 운영과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다. 시행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언제든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과정이나 학생들의 자치 활동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년 교육과정은 동학년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획, 운영되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 학생들이 계획, 운영하는 자치회 활동은 고학년 임원들이 모여 계획하고 실천하여 평가한다. 교육 행정 기관이나 타 기관 협조 요청 사항도 자치회를 통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다.

### Ⅲ. 실천하기

#### 1. 학생이 주관하는 교육 활동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행사가 계획되면 교내 곳곳에 포스터가 나붙는다. 학생회나 클럽 주관으로 포스터가 제작되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자 제작한 포스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 행사 진행을 알린다. 불우 이웃 돕기나 운동회, 각종 발표회, 졸업식, 입학식 같은 행사들의 포스터는 전 교 회의의 계획 과정을 거쳐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으로 시작을 알린다. 아이들이 행사 전체를 전적으로



진행하고 관리,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참여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행사의 흐름을 알고 참여 의식과 리더십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 〈사례 1〉 학교 신문 ‘양지 소식’

우리 학교에서는 분기별로 연 4회 학교 신문을 발간한다. 기존의 학교 신문 제작은 선생님들의 업무로 어린이 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만든 신문을 나누어 주거나 원고를 받아오는 일 정도가 기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5학년을 대상으로 신문 기사를 뽑는다. 그 아이들이 6학년까지 2년간 활동하면서 신문의 내용을 구상하고, 기사를 쓰고, 각 페이지를 편집한다. 교사의 취향보다는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아이들의 생활과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신문이 되게 하고 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의 글(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해도 좋은가?),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한 설문 조사(예: 조기유학은 좋은 일인가? 머리 염색은 해 볼 만한 일인가? 등), 체험기(예: 수련 활동 체험기, 현장 학습 체험기), 인터뷰(예: 오남읍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등 학생들의 글만으로 학교 신문 16면이 채워진다.

우리 학교 신문은 훈화조로 시작되는 교장이나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글, 우수한 어린이들 몇 명의 글과 사진으로 꾸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신문은 아이들 전체의 생활과 생각을 보여 주는 아이들의 신문이다. 학교 신문이 나오는 날은 전 교실에 이야깃거리가 넘치게 된다.

#### 〈사례 2〉 아이들이 만드는 현수막

겨울이 다가오면 소방서의 공문을 이첩한 공문이 온다. 이 공문에는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불조심 관련 행사가 예시되고, 심지어 현수막에 쓸 표어의 내용까지 들어 있다. 그 공문에 친절하게 첨부된 표어들은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형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가게에 연락하여 그대로 쓰게 하면 되도록 안내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제시된 표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표어가 현수막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불은 세상을 망쳐요’(2학년 허태훈)이다. ‘4월은 과학의 달’이 아니고 ‘과학이란 전구로 지구를 밝히자’는 현수막이 등장한다. 또 ‘여름 방학 기간 도서관 개관’이 아니고 “애들아, 오늘 뭐하니? 우리 도서관은 참 시원하고 좋은 책이 많아!”라는 현수막이 걸린다. 동학년협의회를 통하여 학년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국어 시간에는 불조심에 관련된 글쓰기나 표어 짓기를 하기도 하고, 사회 시간에는 불의 위험성이나 불조심 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미술 시간에는 불조심 포스터를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불조심 내용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는 등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별도의 행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모든 학생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 교육과정 운영 결과물을 전시하여 서로 비교 감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에서는 실제적인 교육 활동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수많은 어린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학교이다. 자신이 지은 표어가 현수막이 되어 걸린 교문을 드나들며 자랑스러워하고, 친구가 만든 현수막을 보며 부러워하는 학교이다. 그러면서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체험 학습을 해 나가는 학교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항해하는 배의 방향을 바꾸듯 의외로 간단한 일일 수도 있다. 물론, 학교 경영의 깃발을 잡고 있는 관리자의 교육 철학과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에 ‘학생’을 우선으로 두어 구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사의 패러다임이 필수 조건일 것이다.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을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토론하는 전교 어린이회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를 3월에 하지 않는다. 올해 1학기 전교 어린이회 임원은 전년도 12월에 선거를 하여 미리 뽑았고, 2학기 임원은 1학기 말에 뽑는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풍성한 활동을 잔치처럼 전개하며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다. 그러므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입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새 학기 시작하자마자 선거로 어수선했던 기간을 보내지 않는다. 학기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임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당장 시작한다.

전교 임원 선거를 치르는 절차 또한 학생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생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선거 벽보의 규격, 홍보 장소, 유세 기간, 운동원 수 등을 정하고, 어른들의 개입을 차단한다. 가령, 홍보 벽보는 일정한 시간에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제작하여 게시한다.

입후보자 토론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입후보자들은 단순히 자신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지 않고, 무엇인지를 약속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보는 이른바 ‘후보자 TV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녹화되어 아침 방송 시간에 전 교실에 방영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현재의 임원회에서 방송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TV 토론’을 청취하는 유권자 학생들도 피동적으로 청취만 하는 관중이 아니라, 미리 선거 유세를 청취하는 관점을 정하여 후보자들의 공약과 토론 내용을 메모하며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일정한 교육 목표를 향하여 유목적으로 교육 활동을 운영하려는 노력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토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의 토론 과정과 맹목적인 청취가 아닌 비판적 듣기의 과정은, 국어과 듣기 말하기 영역이나 사회과 또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가능한 영역이 된다.

## 3. 현장 체험 학습

우리 학교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이 학년별로 연간 6회 이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학습’으로서의 현장 학습은, 당연히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치는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 분으로 이루어진다.

신종 플루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현장 학습과 수학 여행, 운동회가 취소되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대부분의 교육 활동이 알차게 진행되었다. 학년별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교육

요소를 추출하고,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2박 3일로 예정되었던 6학년 경주 수학여행은 가상 여행에 따른 교내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이 가상 여행은 학부모들로부터 실제 여행보다 더 알차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주 가상 여행’의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경주산대초등학교와 결연하여 인터넷 카페 ‘경주를 담다’를 개설하고, 자료와 정보, 의견 교환하기
- 신라 역사 연표 만들기
- 신라 금관, 화랑과 여왕 꾸며 가장행렬하기
- 경주의 역사와 문화재에 관한 토론회 개최하기
- 경주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 쓰기
- 경주 역사 골든 벨 ‘에밀레종을 울려라’ 실시하기

현장 체험 학습 실시 후에는 학생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사들도 교육과정에 비추어 본 현장 체험 학습 결과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결과 평가에 탑재한다. 이 자료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의 어린이들은 지역 여건상 다양한 교육적 체험이 어려운 학생들이므로 이러한 체험 학습을 통하여 실제적인 교육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설명하면 우리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의 내용과 방법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이 된다.

#### IV. 나오며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활동들을 단 몇 가지 사례로 다 보여 줄 수는 없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지금 교사가 자의적으로 학습 목표나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관행을 탈피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또 한 시간의 학습이 교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활동 1〉, 〈활동 2〉, 〈활동 3〉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는 수업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항해하는 배의 방향을 바꾸듯 의외로 간단한 일일 수도 있다. 물론, 학교 경영의 깃발을 잡고 있는 관리자의 교육 철학과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에 ‘학생’을 우선으로 두어 구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사의 패러다임이 필수 조건일 것이다.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을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고, 때로는 그 큰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사이다. 그 부담 때문에라도 우리는 교육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연**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형성과 과제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교육과정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의 문제가 부각되어 학교 현장에 상당한 파고가 일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더 이상 정책적 슬로건이 아니고, 이제는 넘어서 각 학교에서 실천하여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필자는 최근 몇몇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과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I.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형성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제도화된 학교 교육과 국가 교육과정 체제의 확립에 따라 학교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와 지역, 학교 관여에 대하여 논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관여가 강한 체제를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 체제라고 일컫는다. 전통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력한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여 오던 우리나라의 경우 다변화된 사회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왔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사적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1970년대에 등장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걸쳐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보급(research, development, diffusion, RDD)의 형태에서 학교 수준 개발로의 전환이다. 당시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국가의 교육과정 개발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을 제창하고 실천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현황을 수집하고 논의하고 보급한 곳이 OECD 내부 기구인 CERl(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이다. CERl는 1968년 4월에 OECD 내부 기구로 설립되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관한 여러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그 성과를 각국에 보급하였다. 당시 이들 연구의 초점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다른 형태에 주목하고 학교가 어떻게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등장한 것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아이디어인 SBCE(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이다.

CERl가 처음 SBCE를 제창한 것은 1973년 9월 9일 북 아일랜드의 콜레인에서 개최된 세미나, 일명 콜레인 세미나(Seminar on School Based

Curriculum Development)이다. 이 세미나에는 15개국의 OECD 가입국에서 60명의 대표가 참여하여 'SBCD'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SBCD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프루맥(A.M. Furumark)은 'SBCD는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착수하는 모든 활동을 나타내며, 이때 그 활동은 학교의 일상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 즉 교사 및 학부모, 학생, 학교 행정가에 의하여 착수되고 계획되고 행하여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맥물린(F. McMullen)은 'SBCD는 학교에 기반을 두고 주로 학교 구성원 및 자원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을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다(OECD/CERI, 1979). 이후 CERI는 1974년 도쿄 세미나 및 1985년 이스라엘 세미나 등 SBCD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보급을 해왔다.

CERI의 SBCD 제창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교사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CERI가 SBCD를 제창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개발자'로 위치 짓고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 및 연구 보고서를 발표, 보급하여 SBCD의 등장과 실천을 촉진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 SBCD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한 형태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SBCD의 성립에 있어서 CERI의 의의는 1960년대의 교육과정 개발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새로운 방향의 하나로 그리고 종래의 RDD에 대한 대안으로 SBCD를 처음으로 제창하였다는 점이다.

## II. 우리나라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형성과 특징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에 SBCD를 제창한 국가와는 달리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아이디어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창되기에 이른다.

이들 국가에 비하여 근 20년 정도 늦게 제창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창하게 된 것은 민주화라는 사회적 배경과 분권화라는 교육제도 변화의 배경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5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지역화 제창에 이어,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제창하게 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제창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 및 실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도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아이디어를 더욱 명료히 하고 확대하는 기초를 견지하게 된다. 예컨대, 교육과정 성격에 대하여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임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7). 또, 2007년 2월에 고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년 12월에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초를 견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받아 시행하는 종래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학교 수준 또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차원에서 학교 나름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아이디어가 1992년 고시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 아이디어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은 근 20년간 보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경과에서 우리나라 나름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특징과 과제 등이 드러난다. 우리나라 학교 수

준 교육과정의 특징의 하나는 교육과정 자율성 발휘의 기본적인 틀은 중앙에서 마련하고 그 틀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학교가 결정하는 이분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마련한 자율성 발휘의 기본적 틀은 모든 학교에서는 실행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재량 활동(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창의적 체험 활동)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내용보다 주로 방법적인 측면에 자율성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는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이 중앙에서 제시되고 각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학교 나름의 재구성을 통하여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일련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자율화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교과 및 영역 내 자율성에서 교과 및 영역 초월 자율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변화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율화 보급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국가 단일의 교육과정을 강제한 것에서 제6차 교육과정부터 학교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 아이디어를 도입 보급하여 왔다. 그렇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교과 및 영역 내의 자율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2009년 6월 11일에 발표한 ‘611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기점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및 영역 초월 자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611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에서 제시된 교과별 20% 범위 내 시수 증감 허용 및 교과군과 학년군 도입 허용은 교과 및 학년을 초월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종래와 다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이다. 이들 조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욱 확대 보급되었다.

### Ⅲ.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과제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2년 고시의 제6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왔다. 근 20년이라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따라 학교 현장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학교가 창의적으로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활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특히, 611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과 함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대담한 자율화 조치에 따라 종래의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하여 온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및 실천에서 볼 때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념하여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 지금까지 취하여 온 ‘강제된 자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기본적으로 국가 교육과정 틀 내에서 제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은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서를 붙였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하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류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종래와 다르지 않는 국가 교육과정을 시행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학교 및 교사들은 교육과정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교사들은 그동안 익숙해져 온 국가 교육과정 틀에 관성적으로 적응해 버리기 쉽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서는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강제적 단서를 두는 교육과정 자율화가 극복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자율화의 착근을 위해서는 자율화 정책 내용의 일관성과 시간이 요구된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의 아이디어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근 20년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학교 현장에 정착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이러한 시간적 경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교육과정은 있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활동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최근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과 자율화 내용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나 이것이 충분히 시행되기도 전에 611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발표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내용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변화를 주어 이전의 자율화 운영 방식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적응에 고민하게 되었다.

셋째,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교사의 내발적 실천 의지 및 교사 문화의 형성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보급이 근 20년 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학교 현장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교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과정 전달자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학교를 교육과정 개발의 장(場)으로 하고 교사를 교육과정 개발자로 위치 지어 학교 현실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자율화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 요구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역할 수행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육과정 자율화를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 또는 지시와 동일시하고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경향이 없

지 않았다. 향후 교육과정 자율성이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작동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외부로부터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교육과정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고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창출해 가면서 교육과정 문화를 점진적으로 향상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율성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실천 및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과 학교 현장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종래의 교육과정 정책과 학교 및 교사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정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시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의 조화적 노력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2)</sup>

##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 2009. 6. 11.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부(1997).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1].
- OECD/CERI(1979).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자율형 공립 학교 적용 사례



**박경옥**  
부산남고등학교 교장

## I. 들어가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2009년 6월 11일 ‘교육과정 자율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단위 학교에서 최적의 교육 효과를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 정책 방안 등을 토대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율화 관련 시책들이 어제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종전보다 한층 확대된 이번의 자율화 조치는 다양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아 우리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으며, 고 1학년 과목의 이수 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고 2, 3학년의 경우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과별로 학년 및 학기 단위 집중 이수를 확대하여 학습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 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 시수를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군과 학년군을 도입하는 등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부산남고등학교는 부산의 외곽에 위치한 1955년에 설립된 공립 남자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2007년부터 전인 교육과 미래 대비 수업 방법의 개선을 주제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의 개방형 자율 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본교에서는 자율 학교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미래 역량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교육 활동의 결과들은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으로 이어져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나 언론 기관 및 학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교사 수급 및 수능 제도 등의 대내외적인 한계로 인하여 주어진 자율성을 양껏 발휘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며, 시범 운영 결과 국가나 행정 기관, 단위 학교 수준에서 검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

육과정 자율화 방안에 따른 본교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위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 Ⅱ. 본교 현황

### 1. 학생 현황

각 학년별 8개 학급씩, 총 24학급으로 구성되어며,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교사 현황

교사는 총 53명으로, 공모 교사 27명, 비공모

교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공모 교사의 경우 교통 여건의 불편으로 인하여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꺼려 중학교 전입 및 신규 교사 16명, 기간제 교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시설 현황

수년 전에는 36학급에 1,800명이 재학하던 학교인 만큼 여유 공간이 많아 교과 교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각 교과 교실 및 교실에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구 및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 시설 현황표

총 부지	교 실													체 육 관	계
	보통 교실	특별 교실													
		교과 교실								기 타					
		국 어 실	사 회 제 실	수 학 실	영 어 실	과 학 실	음 악 실	미 술 실	컴 퓨 터 실	진로 정보 센터	도 서 관	상 담 실	정 독 실		
31,339.00㎡ (9,480평)	25	1	1	2	2	3	1	1	1	1	1	1	5	1	46

## Ⅲ. 본교 교육과정 자율화 적용 사례

본교는 자율 학교로서 2007년 개방형 자율 학교로 출발할 당시부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 운영이 허용되어 있었으며, 2010학년도에는 6. 11. 조치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교는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교로서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학교 공동체의 마인드가 확립되어 있는 편이다. 본교의 자율화와 관련한 노력 사항들을 본교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관련 실천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 과정

본교는 3년여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학교 공동체 간 본교 비전인 ‘기본에 충실한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합의 배경에는 학교 교육 활동이나 현안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 1회 실시되는 학교 경영 회의를 통하여 기본적인 교육 철학을 공유하며 개방적인 협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년 단위, 교과 단위 협의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는 편이다. 이러한 학교

수능 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교사들에게 맡은 시간 외의 시간이나 활동들이 주어짐으로써 많은 부담이 주어졌다.  
따라서, 전체에 일반화시키고자 할 경우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 보조 인력 등 인력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는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영향을 끼쳐 어떤 교육 활동을 하더라도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생각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 2.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의 적용

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 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이와 관련하여 본교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입을 치러야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에 근거한다. 고등학교 교육은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교양 과정으로서 어느 과목에 편중하거나 특정 과목을 강화하는 성격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수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본교의 경우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로서 기본 소양 교육도 강조하기에 굳이 특정 과목의 35% 확대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충 학습, 특강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과목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완 유지가 된다고 본다. 더욱이, 현재의 교사 수급 내에서 대입을 고려하여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을 확대할 경우 교사의 시수 부담은 과중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방과 후 시간까지 합친다면 교사의 시수 부담은 포화 상태가 되어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나.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 시기를 고 3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이 역시 본교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학습하며, 이는 교양 수준의 학습을 함으로써 심화 학습을 필요로 하는 2, 3학년에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비수능 교과의 경우 2, 3학년에 배치할 경우 대입을 준비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예상되므로 적용을 하지 않았다.

다. 고등학교 2, 3학년에서의 전 교과 대상으로 선택 과목 신설 허용

이 조항의 경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본교에서는 과목 신설 시 각 교과별 신설의 개념보다는 자율 학교 운영에 따른 특성화 과목으로 접근하였다. 그 내용은 과학 계열과 국제 계열의 전문 교과인 '과제 연구'를 2학년에 개설하여 주 1시간씩 운영하여 왔으며, 3개 학년마다 독서/논술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과제 연구' 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양분하여 주제 탐구 활동을 하는데, 인문은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연은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정리 단계에서는 논문 발표 대회를 가짐으로써 탐구력,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시스템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과목은 3년의 운영 경험을 통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교과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독서/논술’ 과목의 경우 기본 소양과 대입을 위한 심화 독서, 논술의 학습까지 이어지는 과목으로 학년별, 수준별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화 과목들을 운영하여 보면서 아이들의 창의력, 문제 해결력 신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나, 수행 평가로까지 이어지는 실행 과정이 더 많은 과목으로 확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르며, 특히, 수능 외의 다양한 교육 활동 지도에 따른 교사 부담이 커짐에 따라 행정 업무 경감 등의 교무 지원 인력 고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이와 관련하여 본교는 자율 학교 운영 초기부터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도 예방하고 대입 관련 교과 지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심화 선택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다.

마.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 확대하여 학습 부담 경감

이와 관련한 사항도 시행하고 있다. 본교는 과제 연구, 독서/논술, 미술과 애니메이션(창재 시간) 과목을 학기 집중 이수하고 있다. 집중 이수를 하게 되면 집중 이수가 필요한 교과의 경우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짝으로 편성되는 교과 교사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교사들이 학생의 성장을 위하여 양보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간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에 집중 이수 그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럼에도 더 많은 과목으로 확대하지 못하였던 것은 우선 학기 집중 이수로 운영하게 되면 교사 시수가 편중되거나 무리가 되고, 평가에서 소인수 선택 과

목은 불리해지는 현행 성적 처리 산출 방식에서는 내신 산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집중 이수에 따른 학생의 불이익이 없는 과목(과제 연구, 독서/논술) 또는 교육 목표 도달에 집중 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과목(미술,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실, 언제나 그렇듯 몇 과목을 집중이수하고 있느냐의 개념보다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기 집중 이수 또는 블록 타임제 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두 시간 개념의 수업으로 접근하여 수업 방법의 변화까지 연결될 때 집중 이수의 효과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바. 학교 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통합 운영

통합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재량/특별 활동의 통합 운영도 결국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 달라는 요구라면 본교는 통합 운영과 관계없이 평소 미래 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정규 수업의 경우 지향점만 제시하지만, 재량/특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프로젝트 학습이나 체험 학습, 탐방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학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발 활동이나 적응 활동 등 특별 활동의 경우에도 각 영역별 성격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까닭에 굳이 현행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사. ‘학년군’과 ‘교과군’ 도입

이와 관련하여 교원 수급, 수능 시험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못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개념으로 도입됨에 따라 진로 지도와 연계하면서 교육과정을 새로이 편성하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시대 변화를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글로벌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시대사적 흐름과 글로벌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인구 문제 등 국가 여건을 고려할 때 글로벌 창의 인재의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생각하며,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 3. 교육과정 자율화 적용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이상 각 항목별로 본교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적용하면서 시종일관 떠오른 의문은 과연 제도나 개별 정책들이 학교 현장을 바꾸는 충분조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동일하게 출발한 다른 자율학교들의 운영 사례를 보면서 제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를 기를 것인가 하는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즉 학교 풍토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본교의 경우 교사들이 학교 비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교육과정 자율화도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의 자율 학교 지원금이 있었기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달리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능 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교사들에게 많은 시간 외의 시간이나 활동들이 주어짐으로써 많은 부담이 주어졌다. 따라서, 전체에 일반화시키고자 할 경우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 보조 인력 등 인력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과정 자율화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도 많지만 그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 즉, 교육과정 자율화는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고,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가려면 현행 교육과정은 그 적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 이번의 교

육과정 자율화 조치는 이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미래 역량을 지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본다. 실제로 본교는 미래 대비 수업 개선이라는 방향과 과제가 있었기에 실천이 가능하였지만, 역량도 부족하고 시도조차 해 보지 않은 많은 학교들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추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IV. 교육과정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교육과정 자율화는 시대 변화를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글로벌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시대사적 흐름과 글로벌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인구 문제 등 국가 여건을 고려할 때 글로벌 창의 인재의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생각하며,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단위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산길을 가다 장애물을 만나거나 시야가 막히면 장애물을 치우고 가듯 교육과정 자율화를 규제하는 규정이나 불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노력에 불과하다. 교육은 한 길로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어느 한 가지가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은 국가가 길을 닦아 주면 이 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교육을 해 왔다.

문제는 이제 자율로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학교마다 찾아가는 길이 다르다. 전문가 수준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사례를 찾아보는 등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의 변화에 동참하고 체질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답을 모색하며, 실천에 따르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등 교육 행정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에 주어지는 바람직한 자율의 형태는 위에서 아래로 자율권을 주지 말고 밑에서 위로 요구하는 것이 실천적 힘을 가진다고 본다. 강요로는 자율의 참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제도 개선은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실천력도 있고 지속성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교육 행정 기관에서는 학교가 스스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정책 학교 연구 결과를 통하여 좋은 운영 사례들을 일반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의 역량을 수업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행정 보조 인력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여 주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교육과정 자율화 역시 내실 있는 변화를 유

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으며, 전반적 마인드가 확산되어야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겉만 자율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가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드백하여야 한다. 장애물만 제거하여 주면 잘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수동적인 교육 활동에 익숙한 학교는 변화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시작에 해당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지켜보고 환류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급 간의 연계성 있는 진로 진학 지도가 필요하다.

아래 급의 학교 교육과정은 상급 학교의 입학 기준에 좌우된다. 학교급 간 진로 진학 지도가 단속적이어서는 안 된다. 학교 자율화의 방향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온 것이 상급 학교 진학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어느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자율화의 정신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 학교 입학 기준 역시 자율화의 정신과 맥을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입학 사정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로 교육과정 자율화가 글로벌 창의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사정관계가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교과부와 각 대학들에서는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과 지식 위주의 수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는 경쟁 체제이다. 불이익을 당한다 싶은 순간 세상은 편법을 저지르게 된다. 일반 학교가 자율화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미래를 여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여 본다. **연**

# 교육과정 자율화를 구속하는 주변 요인



이평수  
충남 서령고등학교 교사

자율학교 운영은 단위 학교로 하여금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등을 비롯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자율학교 운영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망하였다. 이런 배경 아래, 본교는 올 3월 1일부터 2013년 2월말까지 수학, 과학 교과 교실제 B타입과 과학 중점 학교를 겸한 일반형 자율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운영 과정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정을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율 학교 운영의 취지와 추구하는 바가 높이 평가되고 있고, 이 제도가 완전히 미래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적지 않다.

자율 학교 운영의 근본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의 체감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교사들까지도 자율 학교의 개념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교가 자율 학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자율 학교 신청 시 교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이와 연관

한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자율 학교로 지정된 이후의 학교 변화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다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자율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 학교에 부여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권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중 연간 수업시수를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과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중심 교과목 및 이수 단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이수 단위의 증감 운영이나 이수 단위의 자율적 편성은 교사의 수업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과 간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본교처럼 사립 학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율 학교는 기존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상의 특혜를 인정하는 학교를 총칭한다.’라는 충청남도 교육청 고시 제2010-3호의 내용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수 단위 조정은 학생들의 대학 입시 준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뜰이나 수요자 중심 교육을 앞세우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대학 입시 준비에 유리한 쪽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제어하기는 어렵다. 한편, 특정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일부 대학의 입시 전형 방안도 문제가 된다. 이른바 일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소수 학생들을 위하여 특정 교과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과정 자율화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결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손아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셈이다.

본교의 경우, 연간 수업 시수의 감소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과학 중점 학교 및 수학, 과학 교과 교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수업 시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2단위 증가된 상황이다. 교육과정의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것은 서너 개 교과에서의 한 두 단위 시간 수 조절에 지나지 않는다. 혹시 학교 교육과정 상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과의 이수 단위를 최대한 조정한다고 할 때, 수업 시간 수가 대폭 줄어드는 교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내의 타 학교와 연계하여 해당 교사를 순회 근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교수 활동 이외의 업무에 크게 시달리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순회 근무 교사에게 일반 업무를 맡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담임 교사로 임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계성이 강한 업무를 할당하여 주기도 어렵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이런 어려움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또, 교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학의 특성상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다. 교과목의 개설과 단위 수의 자율적 증감은 이 교사 초빙제와 순조롭게 어울릴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학교 간의 교사 교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립학교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교과용 도서의 자율적 사용에 대한 조항도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12월에 제시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

립고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에는 교과용 도서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란 인정 도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과서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가 무엇인지는 냉큼 떠올려지지 않는다.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정 도서는 매우 다양하다.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으로 볼 때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만으로 충분한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다양한 편이다. 그렇다면 ‘교과용 도서의 자체적 사용’은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교과 신설의 허용을 전제로 하여 제시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수급 문제와 교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란 말이 일선 교사들을 더욱 심란하게 한다. 여기에는 먼저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가 장애 요인으로 대두된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교육과정 이수에 어울리는 교과서를 해당 학교 교사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벽산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 처리에 치여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를 개발하기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교과서 개발은 당장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담보하여야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깊이 있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결코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교과서를 직접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단위 학교의 한 학년 사용 분량만큼 소량을 인쇄하여 배포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저작권 문제 등 고려하여야 할 부분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있기에 굳이 술한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을 절실


자율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이수 단위의 증감 운영이나 이수 단위의 자율적 편성은 교사의 수급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과 간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수 단위 조정은 학생들의 대학 입시 준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특정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일부 대학의 입시 전형 방안도 문제가 된다. 결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손아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셈이다.

하게 느끼기 어렵다.

본교의 실정이나 교육과정 자율화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자율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도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신 성적과 입학 고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있어서 일부라도 이 범주를 벗어난 추가적인 전형 방법이 적용될 경우, 적용 기준과 점수 부여에 있어서의 형평성 유지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대외 수상 실적이나 봉사 활동, 효행 학생 등 비교과 활동을 입학 전형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학교 측 의도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중학교 과정상에서의 각종 비교과 활동 실적을 일률적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 사정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이를 보완할 여지는 있다.

본교의 자율 학교 운영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학교 자체 평가와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감독청의 현장 평가 등을 토대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 상황에서 본교에 허용된 교육과정 자율화는 물론이고 무학년제 도입이나 수업 연한 연장 또는 단축, 학교 내 별도 학과 및 교과 신설 등은 장기간에 걸쳐 매우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사안들이며 하나 같이 민감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아직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일선 고등학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교사 수급에 따른 국가 재정 문제, 교육과정 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대학 입시 문제, 교육 수요자들의 반응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함께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 和彦) (도쿄학예대학 교수)

## 일본의 교과서 편찬 과정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제도의 개요』라고 하는 팸플릿을 발행하고, 교과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팸플릿은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제도를 거의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교과서 제도의 개요』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반 회사에서의 교과서 편찬

일본의 교과서는 검정 제도 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출판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즉, 교과서는 판매에 따라 좌우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만화나 잡지, 소설 등의 출판물과 교과서는 그 성격상 차이가 있다. 그 차이의 하나는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대신이 시행하는 교과서 검정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사에서 작성된 「검정 신청본」은 교과서 검정에 합격하여 비로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된다. 교과서 검정은 검정 기준인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 지도 요령」에 준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 지도 요령에 구속된다. 역사 교과서를 보면, 학습 지도 요령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관, 역사 사실의 평가 등에 구속된다. 소위 「문부과학성 사관」에서 완전한 탈각은 할 수 없다. 검정에서 검정 의견이 부여된 기술에서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실제로는 문부과학성의 전문 직원인 교과서

조사관이 인정하는 기술로 서술되기까지 몇 차례의 수정을 강요당한다. 결과적으로 집필자에게는 본의 아닌 기술이 되는 것도 종종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검정 불합격이 된다. 그래서 출판사의 경영상 문제도 있어 교과서 조사관의 뜻에 따른 기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교과서 조사관은 “이렇게 정정하세요.”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힌트만을 말한다. 그것을 참작하여 정정한 기술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문부과학성은 검정에 합격한 역사 교과서의 기술은 교과서 집필자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검정 불합격이라고 하는 압력 하에서, 문부과학성 사관의 허용하는 범위의 기술이 될 때까지 정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술을 인정했다고 하는 의미로, 최종 책임은 문부과학성 문과대신에게 그 권한이 있게 된다.

일반의 도서와 교과서의 또 하나의 차이는 상품인 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가격이 붙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무상으로 배포된다(국가 예산으로

사들여서 학생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무상으로 배포되는 초 중학교의 교과서나, 학생이 유상으로 구입하는 고등학교의 교과서나, 문부과학성이 최고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문과대신이 가격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그 가격은 대단히 저렴하다. 『교과서 제도의 개요』(2008년)에 의하면, 교과서 1권의 평균 가격은 초등학교 339엔, 중학교 486엔, 고등학교 747엔이다. 최근의 교과서는 전 페이지가 컬러 인쇄로 되어 있어 인쇄 비용만으로도 고가이고, 기타의 제경비를 합산하면 상당한 가격이 된다. 따라서, 교과서 1권의 이익은 아주 적고, 교과서 회사가 채산을 맞추어 교과서의 발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수가 팔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고등학교의 교과서의 경우를 말하면, 최저 3만 부의 판매, 채택이 안 되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拙著 『일한 역사 교과서의 軌跡』(아카시(明石) 서점) 제8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수지가 맞지 않는 교과서가 많아서 발행이 중지된 교과서가 있다. 고등학교용 교과서 『일본사 B』에서 보면, 1998년에는 10개 출판사에 21권이 있었고, 10년 후인 2008년에는 7개 출판사에 11권으로 감소했다. 교과서 수의 감소는 문부과학성이 바라는 바이며, 교과서 수가 적어지면 교과서 검정에서 교과서 내용의 통제가 용이해져 민간 발행이면서 그 내용을 국정 교과서에 가깝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II. 일본의 역사 교과서 편찬

일본의 교과서 편찬 과정을 역사 교과서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일반의 도서와 달라서 페이지 수에 제한이 있다. 페이지 수를 결정하는 규정 등은 없지만, 교과서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하여 교과서 회사 경영자의 모임인 교과서협회에서의 상담 등을 거쳐서 거의 타당한 교과서의 페이지 수가 산출된다. 여기에

서도 검정 제도 아래에서의 교과서 작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사회과 중에서 「역사적 분야」의 교과서와 「지리적 분야」, 「공민적 분야」의 교과서가 각각 1권으로 독립해서 만들어진다. 중학교에서는 「사회과」 교과서가 3권 있다. 중학생은 이 3개 분야를 전부 배우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1학년에서 지리, 2학년과 3학년에서 역사와 공민을 2년간에 걸쳐 동시에 배우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학습지도 요령의 지시에 따라서 「역사적 분야」에서는 전시대(全時代)를 배우게 되므로, 교과서도 전시대로 구성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는 없고 「일본사」와 「세계사」, 「지리」로 구성되는 「지리역사과」와 「현대사회」, 「윤리」, 「정치 경제」라고 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공민과」로 분리되어 있다. 역사를 보면 「일본사」와 「세계사」는 2단위(주 2시간 학습)의 「A」와 4단위(주 4시간 학습)의 「B」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사에서는 「A」는 근 현대사 중심이고, 「B」는 전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구성도 학습지도 요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는 필수이므로, 「세계사」의 「A」나 「B」를 이수한다. 「일본사」와 「지리」는 선택 과목이므로, 이들 중 어느 과목이든 「A」나 「B」 중에서 1과목을 선택 이수한다. 과목의 선택은 대개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지정하고 있다. 학생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상으로 일본사는 중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도, 전시대를 되풀이하여 학습하게 된다. 이를 수용하여 교과서에서도 기술 내용의 수준을 변화시키면서 전시대를 기술하고 있다.

일본사의 역사 교과서에는 그 제작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업 시간 수를 고려하여 거의 그 시간 수에 맞도록 절(節)의 수를 만들고, 1절을 2페이지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절의 모두(冒頭)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절의 마지막까지 배우면 그 문제 제기가 해결되는 것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학습지도 요령에 「사회과」가 있었을 때

에는 사회과의 역사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방법을 추구한 것으로, 이러한 교과서를 문제 제기형 교과서라고 말하는데, 이는 지금도 「고교일본사 A」의 일부 교과서와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에서 채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큰 시대, 장(章) 단위의 페이지 수의 배분을 중시하고, 많은 역사 연구자가 주장하는 계통적인 역사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전체상 제시형(全像提示型) 교과서라고 불리며, 「고교일본사 B」등 많은 교과서에서 채용되고 있다.

대학의 입학 시험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일본사 B」를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어, 대학생의 대부분은 「일본사 B」를 배웠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4년제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전체의 5할을 넘는다.)은 일본사를 선택하면 전시대를 초 중 고에서 3번이나 배우게 된다. 이것은 일본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되풀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역사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는 학생도 있어 한국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Ⅲ. 교과서 편찬의 실제

한 권의 새로운 교과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나, 학습 지도 요령이 개정되어서,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에 준거하여 교과서를 개정하려고 할 때 어떤 순서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필자를 선정한다. 개정의 경우에도 전공(전문성)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인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출판사는 교과서 편집의 중심이 되는 연구자를 결정하고, 그 연구자와 상의하면서 필요한 인선을 한다. 30년 전까지는 1명의 집필자가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연구의 분산화, 연구자의 전문화가 추진되어, 전시대를 한 명이 집필하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각 시대별 전문 연구자를 중심으로 학교 급별 현장 교사들이 집필자, 편집 위원 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는 대학의 교원과 고교의 교원, 통상 10명~15명 정도가 1권의 교과서를 작성한다.

둘째로, 교과서 구성의 결정이다. 인선 후, 학습 지도 요령의 학습이나 이전의 교과서 검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 검토 등을 거쳐 편집 위원이 중심이 되어 교과서의 특징이나 목표를 설정하여 교과서의 편성이나 목차 안을 작성한다. 이 목차 안을 전원이 검토하여 최종적인 목차를 만든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교과서는 총 페이지 수에 제한이 있다. 이 허용되는 페이지 수의 범위에서 역사 교과서에서는 전시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한 시대나 시기에 편중되는 일이 없게 한다. 그러나 그 교과서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페이지의 할당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통사에 해당하는 본문뿐만 아니라, 크게 말하면 칼럼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칼럼은 수업할 때에 참고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혼자서 읽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의 설명이 없어도 읽어서 이해가 되도록 정성스럽게 작성된다. 이 칼럼이 교과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구성을 생각할 때에도 원고를 검토할 때에도 중시된다.

여기에서도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 지도 요령이 영향을 준다. 학습 지도 요령에는 커다란 칼럼을 넣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할 때마다 변화가 있어, 그 지시에 따라서 구성하지 않으면 검토에 합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칼럼을 만드는 방법은 교과서에 따라 아주 달라서 큰 테두리는 학습 지도 요령에 구속되지만, 그 바탕의 연구는 교과서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 페이지 수도 교과서에 따라 달라진다.

세 번째로 원고의 집필이다. 목차가 결정되면 담당자를 결정하여 원고를 집필한다. 그 교과서의 특색, 강조점 등을 근거로 하여 교과서의 원고를 쓰게 된다. 원고는 집필자와 함께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서 교과서의 원고가 된다.

최근에는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검토도 실시한다. 이 경우, 사진이나 그림 등에는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있을 경우가 있어, 1장의 그림을 싣는 것만으로 수십만 엔이나 되는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다. 교과서 회사에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도 있고, 게재가 거부될 경우도 있다.

통상 교과서 집필팀이 편성되고 교과서의 특징이나 구성을 생각하여 원고를 써서 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2년이 소요된다. 그 후, 인쇄소에 원고를 넘기고 몇 차례의 교정을 거쳐 교과서와 완전히 같은 「검정신청본」이 완성된다. 이 작업에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롭게 교과서를 만들 경우에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 오류는 원칙적으로 용서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작성 단계, 교정 단계에서는 다른 일반의 책보다도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교과서라도 교정 오류 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후에라도 교과서의 기술을 정정하기 위한 조치가 검정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역사 교과서는 검정의 과정에서 수정에 의해,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술이 있을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沖繩)전에서 주민 강제 집단사(신문 등에서는 「집단자결」이라고 불렀다.)의 기술이 검정에서 크게 수정되어 교과서 집필자를 비롯하여 오키나와(沖繩) 현민으로부터 교과서 기술의 정정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수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여 정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정에는 문부과학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오

키나와(沖繩)전의 기술에서는 문부과학성은 “검정에 문제는 없다.”고 정정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문부과학성 사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 IV. 글을 맺으며

일본의 교과서 편집 과정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교과서의 작성은 기획으로부터 검정 신청본의 완성까지 2~3년이 필요하고, 검정 신청은 4월에 실시하여 합격 여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해 3월말에 결정된다. 즉, 1년이 걸린다. 합격한 교과서의 견본(sample)을 작성하고, 각지의 교육위원회(초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에 배포하면, 그 교과서의 채택 결정은 8월말에 이루어진다. 채택 수가 결정되면 그 필요 부수를 인쇄하고, 그다음 해 4월 신학기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사용된다. 여기까지 2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교과서는 기획으로부터 사용되기까지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간에 학습 지도 요령에 따른 구성을 생각하고, 검정에서 문부과학성 사관에 의한 정정이 요구되고, 기술에 문제가 있어도 문부과학성의 허가가 없으면 정정할 수 없으며, 교과서의 홍보나 채택 방법, 정가의 결정도 문부과학성에 의하여 지시된다. 그리하여 그 교과서는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교과서 행정, 교과서의 내용은 여러 면으로 문부과학성의 통제 아래에 있다. 집필자의 노력은 이 통제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

##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



김범상 (장원교육 차장)

2011년 교과서 검정 고등 선택 과목 설명회에 다녀왔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새로 교과서를 만들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처음 보는 집필자, 새로운 교과 과정 해설서,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토대로, 마치 탑을 쌓는 석공이 기단부터 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과서의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교과서 개발이라는 어렵고 힘든 작업을 매년 해 나가는 동료나 선배 편집자들의 자랑스러운 작업 모습을 알리고, 앞으로 이 작업을 해 나갈 후배 편집자에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기본으로 각 과목의 원론적인 집필 지침서(그나마도 없을 때도 있지만)만 가지고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과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교과군과 학년군, 집중 이수 학점제 등 기존의 틀이 많이 바뀐 상황이며,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해 주었던 교과서 개발 기준 쪽수에 대한 제시도 없고, 교과서의 판형도 출판사에서 자

유롭게 하라는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중압감은 나를 더 짓누른다.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조사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서의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속에서, 제출 마감 시간은 정해진 터라 새로운 접근보다는 기존에 해 오던 방법으로 정해진 틀에 맞춰 교과서를 만들자는 유혹이 더욱 나를 혼돈스럽게 한다.

보통의 교과서 개발 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심사 기준의 가장 큰 항목인 공통 교육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도록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과목에서 주의할 부분을 정리한다. 그런 다음 각 과목별 교육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하여 분석해 교과서의 기본 콘셉트를 세운다. 특히, 미래형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참고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서 틀에서 벗어나 출판사가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난해한 작업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일까? 또,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만들려면 많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 교과서를 편집하는 사람!**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매번 교과서를 만들 때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한다. 어떨 때에는 두 집단이 협업의 관계일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정말**  
**다시는 보지 않을 원수의 관계일 때도 있다.**



은 양의 교과 학습 내용을 넣어야 할 텐데 이를 어떻게 구성해야 일목요연하고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가 될까? 등의 문제부터 천천히 고민해 보아야겠다.

지난 중학교 1학년 한문 교과서 개발 시에는 기존의 한문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콘셉트, 하지만 제7차 한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자 학습이 아니라 한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데에서 출발하여 ‘한문 문장에서부터 교과 학습을 시작하자.’라는 콘셉트를 도출해 냈다. 이 콘셉트를 도출하기 위해 집필자와 편집자의 신경전은 정말 치열하였다. 이때 가장 고민하였던 부분도 집필자와 편집자의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 교과서를 편집하는 사람!**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매번 교과서를 만들 때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한다. 어떨 때에는 두 집단이 협업의 관계일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정말 다시는 보지 않을 원수의 관계일 때도 있다.

이처럼 ‘교과서’라는 책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토의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며 서로 으르렁거릴 때가 많다. 집필자의 입장에서 현재 학계의 의견과 교육 현장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의견에 대한

자신감으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행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시도보다는 합격을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 가기를 고집하기도 한다.

문장이나 낱말, 주제어의 선택, 한자의 선택, 이야기의 전개나 흐름, 문맥의 구성 등을 하나하나 선정할 때마다 첨예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대립(대부분 편집자가 약자의 입장에 서지만)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기존 방법에서 조금 변형을 준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장하면서 대립하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중간에서 이를 조절해야 하는 교과서 개발 팀장으로서 난처할 때가 많다. 특히, 교육과정의 공통 기준으로 제시되는 사항의 경우나 또 남성과 여성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견들이 나올 때에는 더욱 난처하다. 이럴 때마다 교육과정이나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해당 부분을 찾거나 학계의 정설을 찾아 제시하여 집필자 또는 편집자에게 근거를 들어 납득시키는 일도 팀장으로서 교과서 개발 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출판 관련 집단보다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개인의 차가 더 뚜렷하고 웬만해서는 자기 의견을 굽힐 줄 모르는 성향이 강하다. 또, 근거를 들어 납득할 만

한 이유를 제시하여도 교과서를 만들어 본 경험과 합격의 감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차피 합격을 목표로 하는 작업이라 항상 정도로 갈 수는 없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최일선에 선 편집자로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납득하지 못했는데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일정에 쫓겨 합의하거나 좀 더 다양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하여 아이들에게 잘못된 또는 부족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낱말 몇 개를 바꾸기 위해 몇날 며칠 고민하고, 사진 한 장을 찾기 위해 모든 포토 에이전시와 전문 작가의 프로필을 인터넷에서 뒤지고, 맞춤법 검사기에도 없는 외래어 표기를 찾느라 사전이라는 사전은 모두 찾아보고, 원문 자료를 찾아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여기저기 헤매고, 외국 서적의 관련 항목을 찾아 모르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정확한 자료를 찾는 등의 노력 뒤에 오는 성취감! 바로 이 성취감이 우리를 교과서 개발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 콘셉트를 담아 단원의 원고를 하나하나 구성 요소에 맞게 다듬은 다음에 만나게 되는 우리의 협력자가 바로 디자인과 조판이다. 현재의 교과서 개발사들은 대부분 교과서를 개발해 본 경력자를 팀의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집필자 역시 대부분 교과서를 써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교과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기존 교과서의 경우, 대부분 표지, 면지, 속표지, 내지, 부록 등 어느 정도 교과서 디자인이라는 고정화된 스타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표지에 만화 캐릭터를 집어넣거나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재미있는 삽화를 넣거나 하는 등 변화를 주고, 내지에 유명 삽화가나 만화가의 작품이 들어가는 경향

이 늘어났다. 또, ‘누가 보아도 이것은 교과서 서체야.’ 하던 것에도 기존의 방식을 깨는 다양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쪽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앞으로의 교과서 작업은 편집 못지않게 디자인에 있어 그 중요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의 편집 디자인 영역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는 디자인에 대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좋은, 또는 필요한 디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디자이너도 훌륭한 교과서는 어떤 내용과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을 허무는 직업군으로서 ‘편집 디자이너’라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를 보는 안목과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스스로 창의적인 디자인 시안을 개발할 수 있는 편집 디자이너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판도 기존의 맥 조판에서 인디자인으로 조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면서는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맥 조판보다는 훨씬 내용 확인이 간편해졌고, 따로 맥을 확인할 필요 없이 내 컴퓨터에서도 직접 조판된 내용을 볼 수 있어 편리하였다. 다만, 알 수 없는 출력 에러가 발생하는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다.

이처럼 교과서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편집자로서 교과서를 만들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즉, 교



**교과서를 만드는 편집자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편집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無)에서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을 거쳐 유(有), 즉 교과서라는 하나의 완성된 책자를 만드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편집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나름대로 앞으로 교과서를 개발해 보고 싶은 후배라면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성공적인 교과서 편집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과서 편집자는 정말 박학다식해야 한다. 집필자의 전공 영역에 대해 언제나 방향성과 원고의 학습 내용의 전개에 대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안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편집자이어야 한다. 교과서 개발이라는 작업은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논의와 탐구가 필요한 작업이다. 정확한 근거와 참고 자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검수하는 노력 등 어렵고 힘든 작업을 안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언제나 학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계의 새로운 내용,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 새로운 교육 정보 등에 대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 내실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협업의 한 파트너

로서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으로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열린 자세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역량 외에도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교과서를 만드는 편집자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로서는 개인이지만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공동 작업의 한 일원으로서 언제나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언제나 묻고 머릿속에 각인하는 편집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 음악 교과서 명곡 둘러보기

김대원 (경인고등학교 교감)



우리가 흔히 명곡(名曲)이라고 부르는 곡은 어떤 곡일까? 작품성이 뛰어난 곡일 수도 있고, 널리 알려진 곡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과서에 실린 악곡 중에서 대다수는 널리 알려진 곡이고 작품성이 뛰어난 곡이므로 대부분 명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서양 음악과 국악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 연주 방법에 따라서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눌 수 있고, 연주 형태에 따라 독창(주)곡, 중창(주)곡, 합창(주)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면, 악곡의 형식으로는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소나타, 서곡, 춤곡, 교향곡, 협주곡 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구분한 방식은 주로 서양 음악에 대한 분류이고, 국악의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음악 교과서에 악곡을 실을 때는 음악의 교육적 필요성에 따라 신게 되므로 이러한 분류를 충실히 고려하고 있다. 아무리 유명한 곡이라고 해도 교향곡만 모두 수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바로크, 고전파, 낭만파 등 음악 사조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한 사조의 곡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교과서에 실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 고전파의 작품은 모두 유명하고 음악적으로도 뛰어나지만 교과서에 실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명곡 중에서도 교과서에 실린 곡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글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서양 음악과 국악의 명곡 중에서 연주 형태와 악곡의 형식에 따라 기악곡 몇 곡을 소개하고자 한다.

### ■ 독주 악기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곡 「소나타(Sonata)」 - W. A. Mozart / 피아노 소나타 A장조 K.331

서양 음악에서 독주곡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피아노나 오르간 곡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독주곡으로는 소나타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소나타는 독주 악기와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엄

밀한 의미의 독주곡이라고 볼 수 없으나 피아노 소나타는 대표적인 독주곡이다. 피아노 소나타에는 명곡이 많지만 교과서에 실린 피아노 독주곡 중에서는 3악장에서 터키 행진곡이 나오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K.331을 들 수 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인 이 곡은 소나타이기는 하지만 정규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소나타는 소나타 형식을 포함하는 기악곡을 의미하지만 이 곡의 구성은 1악장 주제와 변주, 2악장 미뉴에트, 3악장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소나타로서는 벗어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아름다운 선율과 동방풍의 스타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특히, ‘알라 투르카(Alla Turca)’, 즉 ‘터키풍으로’라고 적혀 있어 속칭 ‘터키 행진곡’이라고 하는 마지막 3악장은 피아노 초보자들도 쉽게 칠 수 있는 곡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 곡이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워낙 유명한 곡이고 선율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1악장은 변주곡 형식과 3악장의 터키 행진곡의 론도 형식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변주곡 형식은 하나의 주제와 여러 개의 변주로 구성된 형식이며, ‘론도’라는 춤곡 형식은 하나의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 새로운 선율이 중간에 계속 나타나 빙빙 돌아가는 춤에서 유래한 형식으로, 이 곡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주제 선율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형식미를 익히기에 좋은 곡이다.

## ■ 독주와 관현악의 완벽한 조화 「협주곡(Concerto)」 - P. I. Tchaikovsky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sup>♭</sup> 단조 Op.23

협주곡은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대립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연주하는 악곡으로 오케스트라의 힘찬 총주와 독주자의 화려한 개인기를 함께 만끽할 수 있어 클래식 음악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협주곡은 바로크시대의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과 고전파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솔로 콘체르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널리 알려진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는 몇 개의 악기들이 그룹을 지어 대비를 이루며 연주하는 합주 협주곡이고,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의 독주 악기를 위한 협주곡은 솔로 콘체르토로 구분하여 부른다. 이 중에서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전체 협주곡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이 글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소개하고자 한다.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첫 멜로디를 알 정도로 유명한 이곡은 강렬한 호른의 팡파르 뒤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서정적이고 감동적이다. 현악기가 이 선율을 노래할 때 피아노 독주자는 무섭게 화음을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독특하고도 가슴 깊이 다가오는 감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곡이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다. 원래 차이코프스키는 피아노 협주곡을 3곡 작곡했는데 1번이 너무 유명하여 다른 곡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곡은 처음 작곡했을 때 혹평을 받은 것으로 더 유명하다. 1874년 가을, 차이코프스키는 둘

도 없는 친구였던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에게 이 곡을 헌정할 생각으로 들려주었는데 니콜라이는 피아노로 연주하기 불가능한 곡이며, 독창성이 부족한 곡이라고 혹평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차이코프스키가 이 곡을 한스 폰 뷔로에게 헌정하게 되었는데, 한스 폰 뷔로는 이 곡이 독창적이고 지금까지의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극찬하였으며 1년 후에 러시아가 아닌 미국의 보스턴에서 초연되어 대호평을 받았다.

이 곡은 러시아의 정감과 슬라브적인 중후한 선율, 색채 깊은 관현악법이 매력적이다. 제2악장에서는 플루트의 선율이 아름답고, 전곡에 걸쳐 피아노와 관현악의 조화가 뛰어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곡 중에 한 곡으로 꼽힌다.

### ■ 관현악 합주의 최고봉 「교향곡(Symphony)」- L. v. Beethoven / 교향곡 제9번 「합창」

교향곡(symphony)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함께(sym)’를 뜻하는 단어와 ‘울림(phone)’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여러 가지 소리가 함께 울리며 화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관현악곡 중에서 가장 풍부한 소리를 가진 음악임을 알 수 있다. 교향곡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고전주의 시대인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빈 고전파 작곡가에 의해 완성된 음악 형식이다.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이들을 모두 명곡이라고 부르는데 이견이 없겠지만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 교향곡이 특히 유명하다. 이들 4개의 교향곡 모두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중에서도 9번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된 이후에 작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구성과 하모니를 들려주며, 풍부한 소리를 지닌 기악곡과 어울리는 합창곡을 교향곡에 도입



〈사진 출처〉 베를린 필하모니오케스트라(BEST 세계의 음악기행 인터넷사이트)



교향곡(symphony)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함께(sym)’를 뜻하는 단어와 ‘울림(phone)’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여러 가지 소리가 함께 울리며 화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관현악곡 중에서 가장 풍부한 소리를 가진 음악임을 알 수 있다.  
 교향곡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고전주의시대인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빈 고전파 작곡가에 의해  
 완성된 음악 형식이다.



하여 교향곡의 역사를 다시 바꾸어 놓을 만큼 위대한 곡으로 알려져 있어 모든 교과서에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베토벤은 이 곡에서 자신의 생애에 대한 모든 철학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으며, 자신의 불행을 가장 찬란한 기쁨의 형태로 노래하고 싶어 했다. 그 유명한 합창 부분이 있는 제4악장은 특히 감격적이다. 여기에 가사로 사용된 실러의 시는 젊은 시절부터 곡을 붙이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독일의 문호 실러가 쓴 ‘환희에 부침’이라는 시는 당시 전제 군주 사회에서 억압받는 국민들의 해방과 자유를 주제로 한 시로, 당시 독일 청년 지식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애송되었던 시였으며 베토벤도 그 중의 하나였다.

곡은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명의 독창자와 합창단이 함께하여, 교향곡의 역사를 다시 쓰는 형태로 연주된다. 격정적인 관현악 합주로 시작된 4악장은 베이스에 의하여 “벗들이여 이제 이런 노래는 그만 부르고 더 기쁨에 찬 즐거운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겠는가?”라고 외친다. 이 부분은 베토벤이 직접 가사를 붙인 것이다. 이어 실러의 찬가가 나온다. “기쁨이여, 우리 모두 불꽃처럼 취하고 황금의 술로 노래하자. 모두 둥글게 안아라. 세상의 모든 것에 키스하라.”라는 용서와 화합의 노래를 기쁘게 부른다.

이 곡이 초연될 때 베토벤이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곡이 끝나고 모든 청중이 기립하여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것도 듣지 못하여 악장이 그를 이끌어 뒤를 돌게 하여 환호하는 청중을 보게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 ■ 우리나라 정악(正樂)의 국가대표 「영산회상(靈山會相)」

우리나라 음악은 크게 정악(正樂)과 민속악(民俗樂)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어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정악은 양반들이나 궁중에서 즐기던 음악이라면 민속악은 일반 평민들이 즐기던 음악이다. 국악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정악을 대표하는 국악곡을 하나만 들라면 큰 이견 없이 이 곡을 꼽을 만큼 대표적인 정악곡이 영산회상이며, 현재 정악의 기악곡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따라서, 국악을 대표하는 명곡이라고 하겠다.

영산회상은 흔히 합주로 연주하지만 자기 악기에 맞는 가락으로 독주를 하기도 한다. 영산회상은 모두 9곡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 또는 몇 곡만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다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서양 음악이 독주, 중주, 합주의 구분이 확실한 데 비해 국악은 독주가 모여 중주나 합주를 할 수도 있고 합주곡의 한 갈래를 선택해 독주나 중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서양 음악과는 다른 우리 음악의 한 특징이다. 영산회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멋있고 기품 있는 우리 음악이다.

영산회상은 원래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上佛菩薩)’이라는 가사를 노래하던 불교 성악곡이었으나 17세기 이후에 기악곡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회상은 모두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영산회상이라고 부르는 곡은 ‘현악영산회상’으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 타령, 군악의 9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악기는 거문고를 중심으로 가야금, 대금, 해금, 세피리, 양금, 단소, 장구 등 현악기가 중심이 되어있어 ‘줄풍류’라고도 한다. 이밖에도 큰 관현악 합주 편성으로 연주되는 영산회상인 ‘평조회상’, 관악기 중심의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되어 ‘대풍류’라고도 하는 ‘관악영산회상’이 있다. 관악영산회상은 주로 궁중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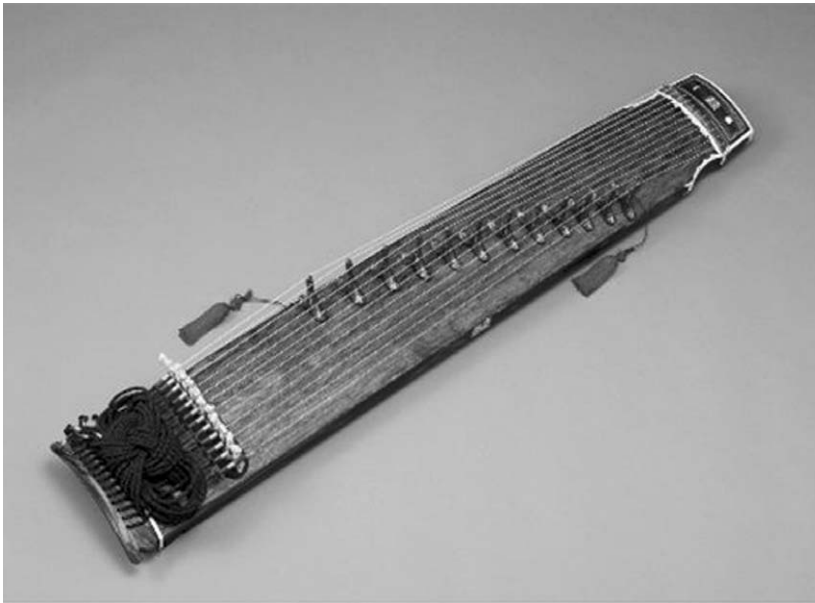
매우 느리고 길며 조용한 상령산을 시작으로 조금씩 빨라지고 가락도 다채로워지며 타령에 이르러 빠르고 경쾌한 춤곡이 되어 빠져들게 하고 힘차고 씩씩한 군악으로 마무리되어 옛 선비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산회상의 맛이라고 하겠다.

### ■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선율에 담은 곡 「산조(散調)」

국악에서 민속악의 대표 주자를 들라면 성악곡으로는 판소리를 들 수 있겠으나, 기악곡으로는 산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서민들의 애환과 사랑, 솔직한 감정을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진하게 토해내는 것이 판소리라면 산조는 악기의 소리로 풀어헤쳐 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허튼 가락, 흐트러진 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산조라는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산조는 즉흥성을 강조하는 음악이다. 즉, 독주 악기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껏 흥겹게 연주하는 음악이 산조이다. 서양 음악으로 치면 구조적 차이는 있지만 소나타에 비견될 수 있는 음악이다.

산조는 원래 남도 지방의 무속 음악인 시나위 가락을 장단이라는 틀에 넣어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으로서 장구 반주가 따른다. 시나위는 굿판에서 무당의 춤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던 즉흥 음악이 연주곡으로 발전된 것인데, 따라서 산조 또한 비교적 형식의 틀은 갖추고 있으나 자유스러움과 즉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산조는 19세기말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김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가야



〈사진 출처〉 산조 가야금(문화재청)

금 산조가 가장 먼저 나왔고 이어서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해금 산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산조는 명인들에 의해 전수되면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명인의 이름을 딴 류(流)로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가야금 산조의 경우 김창조류, 김죽파류, 최옥산류, 박상근류가, 거문고 산조는 신쾌동류, 박석기류 등이 유명하다.

산조의 구성은 연주하는 사람과 악기, 주어진 시간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아주 느린 진양조장단으로 시작해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으로 조금씩 빨라지다가 자진모리장단 또는 휘모리장단, 단모리장단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빠르게 끝을 맺는다. 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에서 시작해 자신을 잊고 한바탕 가락의 세계로 빠져들어 마침내 신명의 극단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음악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새봄을 맞아 오늘은 시간을 내어 교과서에 나오는 명곡을 들으며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연**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지난 5월 4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과용 인정 도서의 개발 일정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으로 정해진 인정 도서의 인정 신청 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5. 4.] [대통령령 제22143호, 2010. 5. 4.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교과서기획과)02-2100-6475~7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1.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 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5. “검정 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6. “인정 도서”라 함은 국정 도서·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 ①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8. 18.>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 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 도서 및 인정 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및 인정

제4조(국정 도서) 국정 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국정 도서의 편찬) 국정 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 도서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6조(검정 도서) 검정 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 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 제7조(검정 실시 공고)

-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 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 기간
  4. 검정 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 수수료 및 그 납부 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8. 18.>

제8조(검정 신청) 검정 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 방법)

- ① 검정 심사는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기초 조사는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 ③ 본심사는 제7조 제1항 제4호의 검정 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전문 개정 2009. 8. 18.]

제10조(합격 결정)

- ① 검정의 합격 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 2. 29.>
-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 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중 하나라도 검정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 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8.>
-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의 2(이의 신청)

- ① 제9조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히 적어 검정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 8. 18.]

제11조(합격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 2 제2항에 따라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 1. 검정 도서명
- 2. 검정 연월일과 검정 번호
- 3. 책수 판형 쪽수, 종류 수량 용량 및 사용 환경(음반 영상 전자 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 4. 지질과 제본 방법
- 5. 사용 대상 학교
- 6. 최초 사용 학년도
- 7. 저작자의 성명
- 8. 발행자의 주소 성명

제12조 삭제 <2009. 8. 18.>

제13조(검정 수수료)

-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신청 도서의 쪽수, 검정 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고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2010. 1. 6.>

제14조(인정 도서의 신청)

- ①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말한다.)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 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정 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도서의 인정 신청 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5. 4.>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 대학에 소속된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의 교원 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 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정 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제15조(인정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6조(인정 도서의 인정)

-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 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인정 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중 “제7조 제1항 제4호의 검정 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 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9. 8. 18.>

#### 제17조(인정 도서의 사용 범위 등)

-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 그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 도서를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정 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 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 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 가격 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6. 19., 2008. 2. 29., 2009. 8. 18.>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 6. 19., 2008. 2. 29.>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
3. 행정 기관 또는 교육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7. 물가 조사 기관 원가 계산 기관 소속 관계 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제20조(위원장 등)

-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8. 18.>
-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회의)

-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 제23조(연구 위원)

- ① 검정 신청 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 위원은 검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 제23조의 2(실무 위원)

-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 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8. 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1. 인쇄 출판, 원가 계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 출판, 원가 계산 분야의 종사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본조 신설 2004. 6. 19.]

제2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연구 위원 및 실무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9.>

제25조 삭제 <2004. 6. 19.>

### 제4장 수정 및 개편

#### 제26조(수정)

-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 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 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정 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 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제27조(개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정 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5장 발행

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쇄 제본 및 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정 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제29조 삭제 〈2009. 8. 18.〉

제30조(주문)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 4의 교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 제6장 가격 결정 〈개정 2009. 8. 18.〉

제32조(국정 도서의 가격 등)

- ① 국정 도서의 가격 결정은 입찰 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정 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 ③ 국정 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 과목군별 총 계약 금액을 총 발행 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 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 개정 2009. 8. 18.]

제33조(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의 가격 등)

- ①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 8. 18.]

제34조 삭제 〈2009. 8. 18.〉

제35조 삭제 〈2009. 8. 18.〉

제36조 삭제 〈2009. 8. 18.〉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32조 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 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 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9. 8. 18.]

## 제7장 감독

제38조(검정 합격 취소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검정 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 표시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 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도서의 인정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합격의 취소

## 제8장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1.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 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 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기준의 결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 도서에 대한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처분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 도서에 대한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수정의 요청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 도서에 대한 제33조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권고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 처분에 대한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 교육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 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 18.>

부칙 <제22143호, 2010.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 교과서별 구입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특수학교	미래엔컬처그룹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01-5120
	중학교	○ 국어 2, 3학년(생활 국어 포함), 국사, 특별 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02)3475-3800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확률과 통계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 윤리 계열, 농업계	지학사	(02)330-5302
		○ 외국어계(아랍 어 1, 아랍어 2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생활과 과학, 고급 수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체육 개론, 스포츠 과학)	교학사	(02)701-5120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인정 교과서 미포함)	한국검정교과서	(02)2657-3540~4

## | 서울 지역 직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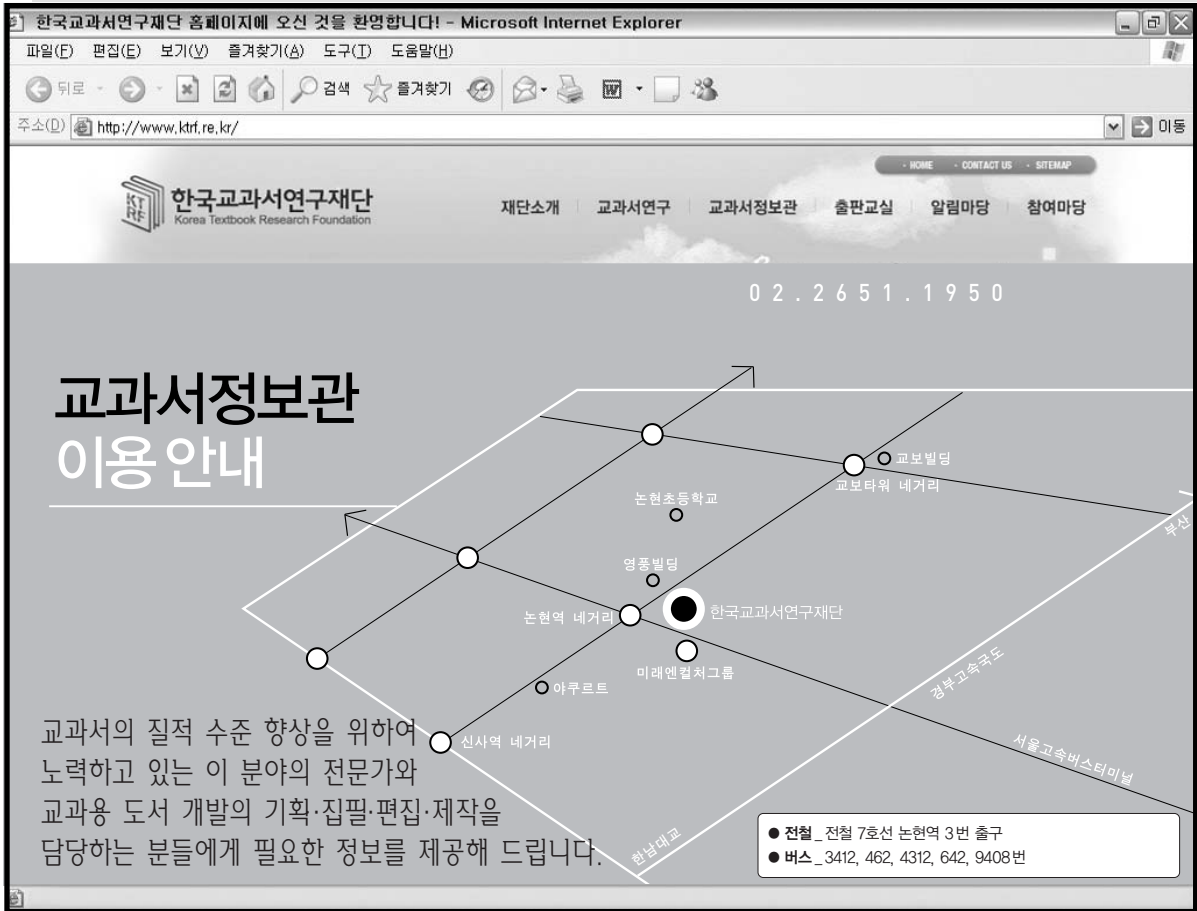
- (주)미래엔컬처그룹 직매장 - 모든 국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컬처그룹 빌딩 1층(☎ 02-3475-4097)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두산동아(주) 직매장 - 모든 국정(검정 일부)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02-3670-5106, 9)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모든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_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포인트 3.5매)
· 원고 제출	수시 접수
· 원 고 료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E-mail 접수 (editor@ktrf.re.kr)
· 기타 문의	전화 (02) 2651-1953 연구지 담당자 앞



## 운영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자료

구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32,274	6,587	38,861
일반 자료	2,928	-	2,928
계	35,202	6,587	41,789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열람시간

구분	시간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